

# 제289회國會 (臨時會) 일자리만들기特別委員會會議錄 第4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4月6日(火)

場 所 企劃財政委員會會議室

##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윤석용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불공정거래 차단되어야!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중소기업의 살림은 더욱 어려워짐. 기초체력이 튼튼한 대기업은 불황이 오더라도 상당기간 견뎌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체력도 약하고 ‘밑천’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집행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법 위반업체 수가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구두발주,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은 미흡한 실정인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 법률’이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끝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확립되어야 하며, 금번 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러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랍.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관련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체 수의 99.9%, 취업자 수의 8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성장이 매우 중요함.

○현재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2009년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에서 중소기업은행에 8,000억 원을 출자하고, 신용보증기금에 1조 9,800억 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7,200억 원을 각각 출연하였으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조달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는 신용보증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점진적 축소 이유는 무엇인지?

-경기회복으로 점차적인 축소 예정, 자생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분류를 위함.

▷그러하다면,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 있을 것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최근 성과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향후 국가재정 여건상 신용보증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그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임.

◆미소금융사업 지원 관련

▷금융위원회는 작년 9월에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美少金融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미소금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임.<개편내역 2p 참조>

▷미소금융 대출자적 신용등급 평가는 어떤 기관들에서 하는 것인지?

- 신용정보 회사에서 KCB(코리아 크레디티 뷰로),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3사에서 신용등급 평가를 하고 있음.

- 3사 중에 한 곳에서 신용등급을 평가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등급평가의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닌지?

▷ 결과적으로 미소금융 대출자격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규정을 정한 것은 서민의 자활지원이라는 목적에 지나치게 제한적인 것 아닌지?

▷ 앞으로 대손율이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고객기반을 잠식할 수 있는 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 따라서 현 시점에서 미소금융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제도상·운영상의 개선·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정진섭 위원

#### (환경부)

◆ 환경산업의 고도화가 국가의 지속발전을 가능케 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 대두되고 21세기에는 범지구차원에서 대응하기 시작함.

기후변화협약, 런던협약, 바젤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등 수많은 국제협약이 이루어짐.

산업화 이후 삶이 윤택 해졌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인 환경병과 환경공해 등 환경의 유해성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삶을 갈망하게 됨.

21세기는 환경산업의 고도화 없이는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환경산업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임.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발의하여 지난 1월 13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동 법률은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하나 주무부처는 환경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동 법률 제35조를 보면

“제35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①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녹색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동 법률의 시행에 맞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환경부는 미래 산업의 핵심은 환경산업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물, 공기, 자연, 폐기물, R&D사업 등의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겠음.

1. 미래의 황금산업, 물 산업육성 계획은 계획에 그치고 있다.

환경부는 07. 7. 16일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상하수도서비스업의 구조개편, 핵심기술의 고도화 및 우수인력양성, 물산업의 수출역량강화, 물산업 연관산업 육성, 물산업 육성기반 등을 구축하겠다고 함.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가?

- 상하수도서비스업의 구조개편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상수도의 경우 수돗물음용비율은 오히려 떨어져 1%를 벗어나지 못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은 시범사업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하수도의 경우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해 수집조를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I/I분석이라는 새로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 핵심기술의 고도화 및 우수인력양성을 위해 산학연을 연계하고 물산업 분야 우수대학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지정은 했는가?

우수인력양성은 청년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인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하고 있는가?

우수인력양성이라 할 수 있는가?

전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물산업의 수출역량강화, 물산업 연관산업 육성, 물산업 육성기반 등 모든 추진계획이 계획에서 끝나고 있음.

-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적 대응 방안은?

2. 대기질 개선사업은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는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4년까지 먼지는 00년 동경수준(40 $\mu\text{g}/\text{m}^3$ ), 이산화질소는 01년 파리수준(22ppb)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작 자동차는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운행자동차관리를 하고 사업장관리는 대형사업장총량관리, 중·소 사업장 관리를 하겠다고 함.

-DOC(RV차량), DPF(트럭), 부착 시 미세먼지는 25%와 70% 이상 감소하나 질소산화물은 오히려 증가하는 제품도 있으며, 질소산화물의 감소율은 평균 1.6%에 불과하여 효과가 없음.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DOC의 경우 일부 자동차에는 부착하지도 못 했음.

미래산업 기술인 환경기술의 올바른 적용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오류를 범한 사유는?

-수도권의 사업장 대기오염총량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3. 폐기물의 리사이클링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원의 고갈과 환경문제로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환경부도 이에 따라 매립되는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연료화시설을 만들어 지난 9월에 준공하기로 함.

-그런데 금년 4월 현재까지 준공을 못 하고 있음.

특히 기존 펠렛공정은 사용할 수도 없고 플로피 공정만 가동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절차 없이 무리하게 시행한 결과임 .

동 사업은 향후 우리나라 전역에서 시행될 시범사업으로 철저한 검증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대해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건설폐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고부가가치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들이 있음에도 단순매립 처리되고 있음.

폐전주의 골재, 폐 아스팔트의 재생 등의 기술들이 개발되었음에도 귀중한 자원들을 단순매립하고 있음.

자원의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환경기술의 퇴화를 가져오고 미래의 일자리를 사장시키는 결과임.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 판단하는지?

4. 환경신기술 현장적용 70%에 불과하다.

98년도 환경신기술 제도도입 이후부터 09. 12월 말까지 약 12년간 총 321건의 기술에 대해 환경신기술 및 환경기술검증서가 발급되었는데, 이 가운데 현장에 한번도 적용되지 못한 기술이 96건에 달하고 있음.

매년 800억 가까이 투입하여 기술을 성공하고

도 현장에 적용하지 못한 기술이 96건에 달한다는 것은 문제 있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19조의3은 공공기관의 환경시설공사 및 설계용을 발주하는 때는 환경신기술을 우선활용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그 사유는?

-공공기관의 환경시설공사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도 신기술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신기술발표회를 통해 신기술 홍보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5. 환경산업 현장의 인력수급불일치(mis-match)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업무보고서를 보면 ‘환경분야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고용창출 기여도가 낮은 반면,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산업기술에 필요한 전문지식·경력을 가진 인력수요는 증가하나 양질의 환경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예견되었던 것임. 이러한 원인은 정부나 기업이 환경을 부수적으로 여기며 형식적으로 치부한 결과임.

따라서 환경산업은 영세할 수밖에 없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도 없었던 것임.

환경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의 환경기술개발로 mis-match를 해결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과징금 부과율 저조해 카르텔사건 방지하고 있어……

공정거래위는 경쟁정책을 통해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2월, 모 산업의 조아무개 사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대기업 담합으로 인한 중소 플라스틱 업체 피해액이 1조 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담합과 관련된 사건은 07년 21건, 08년 46건, 09년 21건 등 해마다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과징금만 해도 3년간 5,500억이 넘습니다.

<카르텔(업체 간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내역>

연도	건수	과징금액	주요사건
10.3년	3	43.6억	4개 신용평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09년	21	529억	5개 음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08년	46	2,056억	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07년	21	3,070억	3개 설탕 제조, 판매 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그럼에도 공정위는 올 2월 초 소주가격 인상을 담합해 온 11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23%에 불과하는 등 실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는?

이러한 담합은 중소기업의 신규진입을 제한해서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제한요소가 될 뿐 아니라 가격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시민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율 이행준수 및 인상에 대한 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막걸리 세계화에 맞춘 음식문화 상품개발

지난 달 31일 KBS2TV로부터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의 주 소재가 막걸리라는 점은 최근 막걸리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게 합니다.

본 드라마에 협찬한 막걸리가 바로 저희 경기도 광주의 참살이 탁주인데, 국립 환경대의 친환경 농축산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운지버섯에서 추출한 크레스틴이라는 물질보다 더 뛰어난 항암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막걸리의 경우, 왕가에서 마시던 술이라는 ‘역사와 권위’ 이미지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스카치위스키와 ‘사케노진’이라는 체험을 통해, 구매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는 사케 등과 비교해 볼 때, 상품화가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막걸리에 담긴 역사와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축제 등을 통해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견해는?

또한 톡 쏘는 맛을 늘리기 위해 맥주에 사용하는 홉을 첨가하면 막걸리로 인정받지 못해 주세가 올라가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료 배합비율, 도수 등 규제가 많아 다양한 술 제조와 품질향상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데 이를 위해 타 부처와 협의할 생각은 있는지?

독일의 경우 맥주 양조 장인인 ‘브루 마스터’ 교육을 대학정규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와인 은 소믈리에, 사케는 기키자케시라는 인정받는 전문가 자격증 등이 있는 데 반해 막걸리의 경우 교육시스템과 전문 자격증이 없는데, 이를 위해 타 부처와 협의할 생각은 있는지? 있다면, 이를 활성화 시켜 ‘막걸리 세계화’를 만들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폰, 암호기술 글로벌 방식 도입해야……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통신망의 고도화, 방송통신 융합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송통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송통신 실무인력 양성, 방송영상전문교육지원, 디지털방송 기술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12년까지 6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고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더불어 09년 말 전략품목 수출추정치를 보면, 와이브로가 18개국에 6,916억, DMB 3개국에 3,110억, IPTV 10개국 806억 등 우리나라 전략품목을 통해 대륙별 핵심 전략국가 진출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해외시장에서 모바일에서 쇼핑이나 거래를 할 때 웹 표준방식을 따라서 ID와 PW를 입력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Active X라는 표준안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에 글로벌 방식의 암호통신 기술인 SSL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인 OPT와 같은 방식을 허용하여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에 있어 장애요소를 제거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동시에 스마트폰은 보안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이동통신사업자와 백신업체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국가적인 컨트롤 타워를 통해 빠른 위

기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타 부처와 협의할 생각은 있는가?

### (금융위원회)

#### ◆금융위,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

금융위는 선진 일류 금융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금융위 6대 중점과제로 기업투자활성화 적극지원 기업 구조조정 강화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우리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등을 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국책은행 및 보증기관 등에서 전체적으로 93.7조 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견기업들은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 부담으로 일부 기업들은 기업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견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과제에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자금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실제적인 혜택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더욱이 중소기업에 지원되던 은행의 여신을 중견기업으로 돌려야 한다는 금감원에 반해, 금융위는 중견기업 지원은 시급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작년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는지?

### ○김성식 위원

#### (법무부)

1. 소규모 기업의 창업 관련 규제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법무장관의 견해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창업 관련 법규상 해소 가능한 부분은? 업무보고(p. 1)에서 소규모 회사 창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기대효과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법 등 법무부 소관 법률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이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협의/건의한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내역은?

○또한 세계은행 발표 창업 환경 순위가 2009년 53위로 2008년(133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고 했는데(업무보고 p. 1), 창업 환경의 세부항목별 평가내역은?

○세계은행의 평가대상국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라의 어떤 점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어떤 점에서 경쟁력이 취약한가? 이를 근거로 향후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추진계획은?

2. 「중소기업 법률 지원단」 설치 이후 중소기업의 상담분야별 요청 및 처리현황은? 「중소기업 법률 자문단」 설치 이후 중소기업의 상담분야별 요청 및 처리현황은? 설치 이후 법률자문료 총액과 정부의 지원액 및 중소기업 자기부담액(부가세는 별도 기재)은?

○법률 지원단 및 자문단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은? 정부가 지원단 및 자문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은?

3. 수형자·소년원생에 대한 직업훈련이 시행되고 있는데(업무보고 p. 1), 교정시설별로 직업훈련과정의 세부내역은? 특히 소년원생 직업훈련 과정을 개편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개편내역은?

○최근 10년간 수형자 및 소년원생 등에 대한 직업훈련의 기본원칙 및 방향, 기대효과의 변화는? 이에 따른 교육방식, 교육내용, 교육기자재 등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업별·품목별 예산 추이는?

○최근 10년간 수형자 및 소년원생 등의 자격증별 취득 건수와 취득자, 총원 대비 취득 비율은?

○수형자와 소년원생의 직업훈련에 대해 최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현행 직업훈련 과정을 토대로 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은?

4. 출소자 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업무보고 p. 2)에 있어 현행 제도상·운영상 애로사항이나 문제점과 그동안의 성과 등을 토대로 한 법무부장관의 평가는?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은?

○「수형자 취업 및 창업 지원 협의회」 설치 및 구성 현황은?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지원조건과 지원내역, 지원실적은? 출소자 중 지원혜택자 비율현황은?

○「취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현황은?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지원조건과 지원내역, 지원실적은? 출소자 중 지원혜택자 비율현황은?

○출소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에 따라 취업 또는 창업 후 현황은?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 법무

부가 분석·평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관광 서비스 관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현황 및 향후 전망,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계획은? 주요국과 비교해 문화관광 서비스업 세부분야 중 우리나라가 취약한 직종과 원인, 이에 대한 문화부의 대책은?

○또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등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이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견해는? 문화부는 이에 대한 분석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가? 그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해 추진한 정책수단을 주요 내용, 기대효과 및 목표 등을 중심으로 제출하기 바람

2. 콘텐츠 산업의 고용효과가 정체되고 있으며, 관련 학과 전공자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업무보고 p. 1),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등 분석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또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문화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3. 콘텐츠산업의 경우 고용창출이 많고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이 용이(업무보고 p. 1)하지만 1인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창업규제, 대기업과의 공정거래상 문제 등 창의적 아이템의 상용화에 있어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한 미국 등 주요국과의 제도적·경제적 여건 측면에서의 비교·평가와 함께 대책은?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평가·분석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또한 최근 10년간 공정거래 차원에서 공정위나 규제위, 국무회의 등에 건의한 실적과 조치내역은?

4. 문화부는 관광인력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다(업무보고 p. 2)고 하지만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라는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여행수지 적자 폭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제수지상 여행수입이 정체현상을 보이는 반면 여행지출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행수지 추세가 국내 관광산업을 위축 또는 정체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견해

는? 문화부의 주장대로 미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존재한다고 해도 국내 관광산업이 위축 또는 정체된다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견해와 함께 관련 실태조사 등 분석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방송통신위원회)**

1. 미디어-콘텐츠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국산 콘텐츠가 개발·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업무보고 p. 8) 이에 따라 국내 이통사를 중심으로 중소 콘텐츠 사업자 및 1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한다는데, 이통사별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과 개발자 교육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내역을 제출하기 바람.

2. 이와 같이 안정적인 콘텐츠 개발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나, 개발된 아이템의 상용화에 있어 개발자의 재산권(지적 재산권 등)이 보호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막강한 자금력과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대기업에 의해 중소 콘텐츠 사업자 및 1인 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은 무엇인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은?

○중소 콘텐츠 사업자나 1인 기업들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등 분석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또한 최근 10년간 공정거래 차원에서 공정위나 규제위, 국무회의 등에 건의한 실적과 조치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

1. ‘전체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임금노동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다’는 등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큼. 그러나 현재 경제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 등에 의해 중소기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분석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국내시장에서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수준은? 어떤 산업에서, 어느 측면에서 취약한가? 이와 관련된 실태

조사, 연구용역 등 분석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재정부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상 문제를 2010.3.29일 업무보고(p.10)에서 언급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는? 재정부와 정책협의를 했는가? 정책협의를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별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가 제도적 여건의 미흡한 점 때문인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평가는?

○정책의 성과평가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하고, 현재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일부 전문가들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관행상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는?

3. 지적 서비스 관련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콘텐츠를 비롯해 지적 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특히 미디어 관련 기업은 대기업이 많지만 콘텐츠 사업자는 중소기업이나 1인 기업이 많은 실정임.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는?

○그러나 최근 창의적 아이템의 상용화 관련 부문(예 : 아이폰의 앱스토어 등 정보통신의 콘텐츠 산업 등)과 같이 1인 기업, 소규모 기업 등이 창업하고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공정거래 상 제도적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장은?

4. 공정위는 2008년 이후 경쟁제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소관부처 및 해당업계에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스산업, 손해보험산업, 항공운송산업 등에 불과함.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경쟁제한제도 및 관행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가? 앞으로의 계획은?

○특히 미디어-중소 콘텐츠 사업자 등 창의적 아이템산업은 초기 산업으로서 기업 규모나 산업·시장 성숙도 등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미흡, 관행상의 문제 등이 있지 않겠나?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는? 공정위는 이에 대한 분석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가? 그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해 추진

한 정책수단을 주요 내용, 기대효과 및 목표 등을 중심으로 제출하기 바람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미디어-중소 콘텐츠 사업자 간 공정거래 수준은?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공정위가 현황 파악을 위해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5.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발적인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공정거래협약에 대해 공정위가 기대했던 효과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성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평가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결과 당초 기대효과를 토대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2007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협약 체결 기업 현황과 그동안 기업들에게 제공한 인센티브 내역은?

○공정거래협약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협력사 양측의 평가는? 이와 관련 실태조사, 협력사 만족도 조사 등 관련 분석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6.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문제에 있어 최근 5년간 민원제기, 신고, 건의사항 등의 접수건수를 유형별로 제출하고, 유형별로 주요 내용과 조치내역을 제출하기 바람.

7. 가맹점의 약관으로 인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제기, 신고, 건의사항 등의 접수건수를 유형별로 제출하고, 유형별로 주요 내용과 조치내역을 제출하기 바람. 또한 이에 대해 공정위가 수행했거나 수집했던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분석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금융위원회)

1.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면 △금융공기업의 대출 또는 보증심사 시 기업의 고용창출효과 반영 △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 및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각 금융공기업별로 구직자·구인기업 연계, 창업기업 발굴 등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활성화 등 세 가지 아이템을 제시(업무보고 p. 5). 이로 인해 현재까지 지원된 기업과 구직자, 창출된 일자리 수 등 3가지 아이템별 성과는? 시행효과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평가는?

2. 중소·중견기업 투자펀드 등 자금공급 수단을 확충한다면 ABS 발행주체 요건(상장법인

및 BBB이상 기업 등)을 완화한다는데(업무보고 p. 6), 자산유동화제도 개편 관련 세부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무분별한 자산유동화상품에 기인한 점을 감안하면, 발행주체요건 완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함. 이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견해는? 어떤 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이며, 각 요인별로 어떤 대책이 있는가?

3.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할 정도로 고용창출력이 악화되고 있어 예전과 같이 투자가 곧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패러다임에 대한 우려에 대해 대부분의 경제전문가와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음.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금융공기업의 역할 강화한다면서 1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기업에 공급하고 있고(업무보고 p. 4), 대출 또는 보증심사 시 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추진(업무보고 p. 5). 대출 또는 보증심사 등 기업의 재무평가뿐만 아니라 사업평가 등 개별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평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금융정책당국으로서 1997년 이후 투자 등 성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현저히 감소하는 상황을 기업의 경영활동 측면에서 구조조적인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현황, 정부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외환건전성의 문제가 발생하면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어려움.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방안은 외환건전성 확보라 할 수 있는데, 2008년 이후 외환건전성 강화를 위해 발표한 정책수단(Action Plan)을 주요 내용, 기대효과 및 목표 등을 중심으로 일지 형식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이후 외환건전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기존 정책/규제 중 국내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와 같이 강화조치에서 제외된 정책수단/규제를 제외한 이유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의 업무보고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음. 2008년 이후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발표한 정책수단(Action Plan)을 한시적 지원과 영구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주

요 내용, 기대효과 및 목표 등을 중심으로 일지 형식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한 한시적 지원에 대한 금융위의 향후 조치계획은? 한시적 지원을 종료할 경제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경제성장 등 계량적 기준 등)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높아져 가는데 부도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엇갈린 경제지표들과 미진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실적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의 무분별한 자금지원에 의한 한계기업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견해는?

### ○박준선 위원 (법무부)

◆재소자 직업훈련 및 출소자 일자리 제공이 사회안전 증진

#### 1. 현황 및 문제점

##### ○갱생보호사업

-법무부소관 일반회계 갱생보호사업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민간법인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출소자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주거지원, 재사회화 교육 지원등을 내용으로 함.

○출소자의 의미 있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동부와 법무부 협조 관계 구축 필요

-특히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관련하여 연계 필요

##### ○직업훈련 관련

-현재 직업훈련교도소는 화성과 청송 2곳에 있음.

-청송직업훈련교도소의 경우 접근성이 부족하여 일자리 연계가능성이 떨어짐.

-징역형은 징역을 부과하여야 하나, 징역을 부과하지 않는 미지정자 다수 존재

○법무부 교정본부는 2008년부터 교정시설에 취업창업 전담반,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형자 취업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실적이 고무적임.

#### 2. 문제점 및 질의

##### 가. 갱생보호사업

☞ 일반출소자와 갱생보호시설 내 입소자의 재범률(2007년 기준)을 비교해 보면, 일반출소자의 재입소률이 52.3%인 반면 갱생보호시설 내 입소



자의 재범률은 1.6%에 그치고 있어 갱생보호시설 내에 입소자의 재범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민간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이 출소자의 재범률 축소에 크게 기여하고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 공단은 경영활성화를 통한 자체수입 확보노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하되,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 외국의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은 일본 70%, 홍콩 90%, 대만 90%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2009년도 공단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이 56.5%에 불과함. 국가차원에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고 출소자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동 사업을 재정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재정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관의 생각은?

- 갱생보호 민간법인의 경우 재정여건이 취약함에도 자체 재무구조 대비 평균 국고보조율이 30% 정도인데 타 복지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 70%를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동 단체들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생보호민간법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비율이 타 복지사업에 비해 국가보조율 지원이 미미하므로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향후 계획은?

☞ 연도별 출소자는 평균 6만여 명으로 대부분이 생계 자금 등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문제, 가족문제, 약물중독문제 등에 직면하게 되어 출소 직후부터 사회적응과정에서 자립의 난항은 물론, 냉대한 사회분위기를 접하게 되는데, 개인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소자의 어려움과 냉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출소자 재범의 악순환을 이어지고 이를 다시 해결(수용·교정·교화)하기 위해 사회적인 비용증가에 따른 재원낭비가 예상된다.

- 우리나라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범죄의 예방단계에서 약 7조 5000억 원, 결과단계에서 약 7조 2000억 원, 대응단계에서 약 8조 6000억 원, 총 23조 1,200억 원을 추정(조홍식, 「범죄

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2009.)

- 본 위원은 예방적 조치인 갱생보호사업을 통하여 출소자의 취업알선,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를 방위할 수 있다고 생각함.

- 갱생보호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생각과 계획은?

나.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연계 필요

☞ 출소자 일자리 제공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가 있는지?

- 출소자도 사회의 취약계층임.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출소자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보다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에 봉사하는 등 공익을 추구하므로 출소자의 교화 및 재범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노동부와 출소자 일자리 제공 관련하여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장관의 생각은?

다. 직업훈련 관련

☞ 현재 특화된 직업훈련 교도소는 청송과 화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청송 직업훈련교도소는 오지에 있어 일자리 연계효과가 적다고 생각됨. 즉, 접근성이 떨어져, 수준 있는 훈련장사 섭외 곤란, 주변에 기업의 수가 적어 일자리 제공으로 이어지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생각은?

- 본 위원은 직업훈련교도소가 재소자들이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받고 출소 후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지금 현재 금고형은 거의 선고가 되지 않고,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정역에 복무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로 알고 있음.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도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 수형자, 즉 미지정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전체 수형자의 수는 어느 정도이고, 이중 미지정자의 수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 본 위원은 특히 미지정자가 인권위 진정, 법무부장관 청원, 고소, 고발 등을 남용하여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도관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

- 하루종일 일을 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 구

속되어 있으면 만 생각이 들고 수형자 교정, 교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질병이나, 타수용자의 악폐 감염, 타수용자 위해 가능성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정역을 부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장관의 생각은?

-부과되는 정역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정역이 재소자의 직업과 관심분야, 적성을 고려하여 부과되고 있는지?

-수형자들의 정역이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출소 후에 자신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교도소의 정역이 출소자의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와 관련한 법무부의 계획은?

라. 수형자 취업지원업무

☞ 법무부 교정본부는 2008년 3월부터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 취업창업 전담반을 구성하고, 이어 4월에는 외부 취업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원조직을 능동적으로 구축하여 수형자 취업지원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그 결과 취업지원 실적이 2008년 672명에 이어 2009년에는 두 배 가까운 1,107명을 달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과가 아닐 수 없음. 특히 작년 10월 제1회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341명이 참가하여 131명이 취업된 것은 고무적인 일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행사로 금년에는 전국 규모로 확대하여 오는 4월 27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수형자 취업지원 정책은 수형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돕는 동시에 재범을 예방하여 우리 사회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임.

☞ 또한 금년 2월 3일 법무부 취업정책협의회를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취업 관련 민·관 기구 임원, 간부급으로 구성, 발족하여 범 국

가적 차원에서 수형자 취업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평가됨.

☞ 법무부 교정본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 뒤에는 법무부장관의 큰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실질적 성과가 계속 이어지도록 더욱 이끌어 주시기 바람.

☞ 끝으로 본 위원은 출소자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의 재범을 막고 사회의 치안을 유지, 사회를 방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함. 아무리 처벌을 강조하더라도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자신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음. 재소자에게 직업훈련,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하는 것이 재범율을 줄이고 사회방위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됨. 장관은 이점 유의하기를 바람.

**(금융위원회)**

**◆금융인력양성사업 및 인턴고용 확대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금융위원회의 금융인력양성사업(19억 원)은 2010년도 예산은 녹색금융리더양성(9억 원)과 실무금융전문인력(녹색금융전문가 등)(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음.

-동사업은 부족한 금융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양성·공급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문

-기재부 국제전문 금융인력양성 과정과의 중복 우려 : 통합 필요

○금융회사 인턴채용으로 청년층 실업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하나, 비정규직 양산 가능성

-금융회사들은 2009년 중 1만 235명의 인턴을 채용하여 당초계획(6,640명) 대비 151.8% 채용

-취업을 앞둔 청년층에 폭넓은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여, 유능한 인재 조기 확보 및 취업교육 기회를 제공

<금융업권별 인턴채용 실적(09년 말)>

구분	금융공기업	은행	증권	보험	제2금융권	계
예정인원(명)	700	3,990	740	910	300	6,640
채용실적*	1,206	6,416	1,510	705	398	10,235

\* 09년 중 신규 채용된 인턴 인원 기준 (계약만료자, 중도퇴사자 포함)

## 2. 질의

### 가. 정부의 재정지원 타당성 의문

☞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장에 서 필요로 하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권이 수혜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합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임.

☞ 금융위의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노동부에 비해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가 저소득층이 아닌 계층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금융인력양성사업의 단가는 얼마인지?

-특히 금융관련 전문인력은 외국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많은데 국가가 국비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맞는지?

-국가가 재원을 들여 일자리 사업을 하면 취약계층이 많이 참여하여야 적당한 것이므로 차라리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투입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금융위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교육 훈련을 위하여 별도로 조치하고 있는 것은 있는 지?

☞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지만 특히 정규직에 비해 교육훈련의 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음.

-금융회사의 비정규직 교육, 훈련 현황에 대해 조사된 것이 있는지?

-정규직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에게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능력을 개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금융회사에게 비정규직의 교육, 훈련기회를 확대하도록 독려할 계획은 없는지?

☞ 정부는 대학 및 금융권에서 금융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금융전문인력양성은 현저한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때까지로 한정하는 등 향후사업운용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 나. 타사업과의 중복우려

☞ 금융위원회의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기재부의 국제금융인력 양성과정과 중복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적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유사 사업 간의 통합이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케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통합할 의사는?

☞ 노동부와 협조하여 실업자, 재직자 훈련을 하면 별도의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굳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업자는 직업능력계좌제를 통해, 재직자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재직자 직업훈련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다. 인턴고용 확대

☞ 업무보고서 p9에 보면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 청년인턴 확대 및 우수 인턴사원에 대한 정규직원 채용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금융산업 자체의 고용창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임.

-인턴제는 급조된 일자리로 양적확대만을 통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위원장은 인턴제 확대가 일자리 창출의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보는지?

-인턴고용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정규직으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금융위에서 일자리의 양적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사업 시행주체 문제 및 영화 스태프 처우 문제

#### 1. 현황 및 문제점

○2010 문화부 재정지원일자리 현황

-목표 : 총 18개 사업, 1만 5,177명(예산 1307억 원) 지원

-실적(3.31.현재) : 1만 3,058명 채용, 연간목표 대비 86% 달성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사업」(41.8억 원)은 디지털 통합방송제작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른 방송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디지털 통합방송 저변확대 및 방송교육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들은 낮은 임금, 만성적인 임금체불,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 있어 영화산업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임단협 적용 전후 영화 스태프들의 임금 변화**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임단협 적용 전 (2005년)		임단협 적용 후 (2007년 이후)	
직 급	총임금	총임금(세전)	실수령액
퍼스트급	1157만원	1475만원	1262만원
세컨드급	714만원	908만원	799만원
서드 이하	466만원	543만원	496만원

\*편당 스태프 평균 임금은 임단협 적용 뒤 실수령액 기준으로 852만원

2. 질의

가. 사업시행주체 혼선으로 인한 문제점

☞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07회계연도 국회의 결산심의과정에서 「방송통신 인력양성사업」과의 중복가능성이 제기되자 2개 부처 간에 인력양성과 관련된 협의를 도출한 바 있음.

※협의를 주요내용은 현업 방송인력은 방송통신위원회, 예비 방송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

- 현업 방송인력과 예비방송 인력의 교육과정과 내용은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구분하여 협의한 이유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2사업 간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부장관의 생각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생각은?

- 어느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 영화진흥위와 영화노조가 2009년 스태프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스태프 1명이 영화 한 편을 찍을 때 받은 평균임금이 852만 원으로 조사됨.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임.

- 2009년 제작편수가 줄어 스태프들의 제작참여 편수가 1.5편에 그쳐 연봉이 1020만 원 수준임. 2009년 들어 임금체불 건수는 41건으로 2008년 32건보다 28% 증가. 총 체불액은 14억 원으로 추정

- 연간 근로기간은 평균 6.35개월이며, 상대적으로 팀장이 길고 수습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약 38%의 영화스텝이 임금체불 경험. 계약의 형태도 서면계약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아직도 구두계약이나 계약없이 근무하는 사례도 있음.

- 2009년 최저임금이 시급 4,000원, 월 88만 원(주44시간 근무), 연으로 하면 1056만 원임. 영화 스태프들의 평균 연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본 위원은 신고된 임금 체불건수나

액수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됨.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

- 일각에서는 제작가이드 라인과 임금문제를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만성적인 임금체불,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만으로 역부족이면 노동부와 협조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생각은?

☞ 2010년 문화부 재정지원 일자리 현황을 보면, 총 18개 사업, 1만 5,177명(예산 1307억 원) 지원이 목표이나, 3. 31. 현재 실적은 1만 3,058명 채용, 연간목표 대비 86% 달성함.

-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목표대비 86%를 달성하였다면 계획을 너무 낮추어 잡은 것은 아닌지?

- 아니면 양적확대에만 치우쳐 일자리의 내실에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 일자리의 양적확대보다도 근로자 처우개선, 정규직 전환, 취약계층 보호 등 일자리의 질적향상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화부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환경부)

◆전문인력 양성사업

1. 현황 및 문제점

○온실가스 관리 전문인력 양성

-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과제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추후 국제협상의 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

○전문인력 양성 후 특히 취업연계성에 대한 대책 필요

<10년도 전문인력 양성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10예산	지원인력
		11,767	1,530
전문인력 양성	국제환경규제정책전문인력양성	317	40
	온실가스관리전문인력양성	2,120	250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운영	1,500	150
	생태독성·위해성평가전문인력양성	700	120
	물산업프로젝트매니저양성	1,000	110
	토양지하수전문인력양성	1,000	150
	폐기물에너지자원화전문인력양성	2,400	240
	지식기반환경서비스전문인력양성	650	100
	환경기술인력양성	1,180	250
	에코디자인전문인력양성	500	100
	수치예보전문인력양성	400	20

2. 질의

가. 온실가스 관리 전문인력 양성

☞ 최근 3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4. 6(화). 국무회의 통과예정)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환경부가 국가 및 사업장 인벤토리(온실가스 배출 통계) 총괄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연2만 5000t CO<sub>2</sub>) 가 약 600개 정도인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관계 부처에서 관리업체로 지정을 하면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분야에 전문인력의 수요가 새롭게 발생될 것으로 보임.

-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2009년에 온실가스 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225명을 교육하였고 2010년에는 21여억 원을 투자하여 250명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보다 내실 있고 기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나.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전반

☞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관리 전문인력양성 사업 이외에도 국제환경규제정책, 생태독성·위해성 평가 등 앞으로 성장가능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 특히 환경부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이 무엇인지와 그 이유는?

☞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우수한 인력이 관련 기업에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사업의 의미가 약화됨.

-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답변서)

○법무부장관 이귀남

(강석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조성 예상실적 시뮬레이션 결과는?

○저희 부가 2009년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상법 등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간접적 효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실적을 구체적 수치나 통계로 산정하기는 매우 곤란하오니, 이 점에 대하여 위원님의 깊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소규모 기업의 창업 관련 규제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견해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창업 관련 법규상 해소가능한 부분은?

○법무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창업 관련 규제 개혁을 위하여 매진하여 왔습니다.

-각국의 창업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우리 실정에 맞는 창업절차 간소화 법안을 마련하여 지난 2009. 4. 29. 국회 의결을 거쳐 2009. 5. 28.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업에 소요되는 절차, 시간, 비용 등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세계은행이 평가한 전년 대비 창업환경이 80계단이나 상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환경이 여전히 183개국 중 53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아직 개선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특히 소규모 회사의 보다 간편한 창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회사 창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기대효과는?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상법)

-과거에는 자본금 5000만 원 이상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현재에는 자본금 100원인 주식회사도 설립이 가능해져 회사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조달 부담 없어집니다.

○유사상호금지 제도 폐지 (상업등기법)

-과거에는 회사 설립 전에 등기소의 등기관이 유사한 상호가 있는지 여부를 약 2~3일간 검토한 후에야 회사 등기가 가능하였으나,

-현재에는 동일한 상호가 아닌 한 유사한 상호라도 등기가 즉시 가능하여 신속한 회사 설립 가능합니다.

○소규모 회사 정관·의사록 공증 의무 면제 (상법·공증인법)

-과거에는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정관 및 의사록에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현재에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에는, 정관 및 의사록 공증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회사 설립 가능합니다.

○소규모 회사 설립 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상법)

-과거에는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절차가 까다로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현재에는 발급절차가 간단한 잔고증명서만으로 충분하여 회사 설립 절차 간이화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상법)

-과거에는 가족기업 등 소규모 회사에도 감사 선임이 필요하여 친인척을 명목상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 설립 시 감사 선임 불필요하여 회사 설립 절차 간이화

○소규모 회사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상법)

-과거에는 자본금 5억 이상의 회사는 이사를 반드시 3인 이상 두어야 하고, 자본금 5억 미만 회사 중 이사를 2인으로 정한 경우에도 이사회를 구성해야 했으나,

-현재에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이사를 1~2인으로 할 수 있고, 이사를 1~2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 없습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법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 및 관련부처에서 협의·건의한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내역은?

○법무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활동을 제고하고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토록 상법 전반에 대한 개정안을 이미 마련하여 2008. 8. 6.부터 2009. 1. 5까지 국회에 각각 제출한 바 있고, 현재 법사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회사편 법안의 내용은 유한책임회사 등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하고, 집행임원제 도입,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며, 무액면주식의 도입 등 재무관리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임.

○법무부는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소규모 회사」의 기업경쟁력 제고 및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부처에서 협의·건의한 사항 중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세계은행 발표 창업 환경 순위가 2009년 53위로 2008년 133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고 하는데, 창업 환경의 세부 항목별 평가내역은?

○세계은행의 창업환경을 평가요소로서, ① 창업에 소요되는 절차, ②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 ③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④ 최저자본금제 유무

의 4가지 항목을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세부항목별 평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2009년도		2008 년도	주요국 평가결과		
	한국	OECD		미국(8위)	일본(91위)	대만(29위)
순 위	53위		-	133위		
절차(수)	8	93위	5.7	10	6	8
소요기간(일)	14	59위	13.0	17	6	23
비용(1인당소득대비비중, %)	14.7	93위	4.7	16.9	0.7	7.5
최저자본금(1인당소득대비비중, %)	0.0	1위	15.5	53.8	0	0

세계은행 평가대상국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경쟁력의 강점과 취약점은 무엇이고, 향후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추진계획은?

○세계은행의 우리나라에 대한 기업환경지수 평가결과를 보면, 채권회수(5위), 국제교역(8위), 퇴출(12위), 대출(15위), 건축 인허가(23위) 등의

부분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러나 고용·해고(150위), 재산권등록(71위), 투자자보호(73위), 창업절차(53위), 세금납부(49위) 부분은 아직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Doing Business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순위변화 (09-10)
종합 평가 (Ease of Doing Business)	19	23(23)*	22	+4
창업 (Starting a Business)	53	126(133)	107	+73(+80)
건축관련 인허가 (Dealing with Licenses)	23	23(23)	22	0(0)
고용·해고 (Employing Workers)	150	152(149)	122	+2(-1)
재산권 등록 (Registering Property)	71	67(65)	62	-4(-6)
대출 (Getting Credit)	15	12(12)	25	-3(-3)
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73	70(70)	66	-3(-3)
세금납부 (Paying Taxes)	49	43(45)	43	-6(-4)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8	12(12)	13	+4(+4)
채권회수 (Enforcing Contracts)	5	8(7)	9	+3(+2)
퇴출 (Closing a Business)	12	12(12)	11	0(0)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지수 중 취약한 분야 중 법무부와 유관한 분야는 투자자보호와 창업절차가 있습니다.

-투자자보호 분야에 대하여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법 회사편 개정안 중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확대, 회사기회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 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규정들이 통과되면 순위 상승이 예상되며,

-창업절차 분야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소규모 회사의 보다 간편한 창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설치 이후 중소기업의 상담분야별 요청 및 처리 현황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설치 이후 현재까지(2010. 3. 20. 기준) 총 678건을 접수하여 617건을

처리하였고,

○상담분야별 현황으로는, 접수사건 678건 중 ①물품대금 등 일반 민사 관련 문의가 307건(45.2%), ②주식 등 회사법 관련 문의가 147건(21.6%), ③국제거래·수출입 분야가 58건(8.5%), ④기업회생·파산 분야가 35건(5.1%), ⑤특허·지식재산권 분야가 25건(3.6%), ⑥노동 분야가 21건(3%), ⑦행정·조세 분야가 17건(2.5%), ⑧개인창업·회사설립 분야가 10건(1.4%), 기타 58건(8.5%) 순입니다.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설치 이후 중소기업의 상담분야별 요청 및 처리 현황은?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설치 이후 현재까지(2010. 3. 20. 기준) 총 73건을 접수하여 56건을 처리하였고,

○상담분야별 현황으로는, 접수사건 73건 중 ①물품대금 등 일반 민사 분야가 38건(52%), ②국제거래·수출입 관련 자문이 26건(35.6%), ③국내계약 자문 등 그 외 분야 9건(12.4%) 순입니다.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설치 이후 법률자문료 총액과 정부의 지원액 및 중소기업 자기부담액(부가세는 별도 기재)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설치 이후 현재(2010. 3.)까지 법률자문료 총액은 8,500만 원이고, 그 중 정부 지원액은 6,800만 원이며, 중소기업 자기부담액은 1,700만 원(부가세 850만 원 별도)임.

법률 지원단 및 자문단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은?

○저희 부에서 2009년 8월 49개 신청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4%가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고, 40.9%가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①자문 대기시간 단축(29%) ②변호사 자문료 지원액 상향(21%), ③적극적인 홍보(17%), ④자금·기술지원 등 타 중소기업 지원과의 연계 강화(14.5%) 등입니다.

정부가 지원단 및 자문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은?

○법률지원은 현재 검사 1명, 변호사 1명, 법무관 3명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처리하고 있어 인력이 다소 부족한 문제가 있고, 자문단 의뢰건은 현재 최고 200만 원(본인부담금 20% 포함)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로 소송수행에 소요되는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해 지원금을 상향시켜 달라는 중소기업의 요청이 많은 실정입니다.

○단기간에 법률지원단 인력을 확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1주일 정도인 처리기한을 보다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현재 자문료 상한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나 자문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통해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 염선 후 탄력적인 지원금 결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정시설별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세부내역은?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27개 교정시설에서 48개 직종, 3,700명의 수형자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국 27개 교정시설에서 기능사 39개 과정(2,391명), 산업기사 14개 과정(816명), 기사·기능장 8개 과정(4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기술숙련훈련 9개 과정(4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생 직업훈련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개편내역은?

○법무부에서는 현재 전국 6개 소년원학교에서 제과·제빵, 카일렉트로닉스(자동차정비), 헤어디자인 등 10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과정 개편은 09년 직업훈련 교육기관을 4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직종을 신설하였으며, '10년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학생 선호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무자동화과정을 폐지하고 측량, 텔레마케팅과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10. 4. 현재 소년보호기관 직업훈련과정 현황

연번	기관명	직업훈련과정	비고
1	서울소년원	제과제빵, 사진영상, 측량과정	10년 측량과정 신설



연번	기관명	직업훈련 과정	비고
2	부산소년원	카일렉트로닉스, 자동화용접, 헤어디자인, 제과제빵	
3	광주소녀원	카일렉트로닉스, 자동화용접, 헤어디자인, 제과제빵	
4	안양소년원	헤어디자인, 피부미용, 텔레마케팅, 제과제빵	10년 사무자동화 폐지, 텔레마케팅 신설
5	대구소년원	제과제빵	09년 신설
6	춘천소년원	헤어디자인	09년 신설
6개 기관		10개 직업훈련과정	

최근 10년간 수형자 직업훈련의 기본원칙 및 방향, 기대효과의 변화와 예산 추이는?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으로 출소 후 산업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자립을 통한 재범예방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형자 직업훈련·예산 변화 내용

연도	훈련인원 (단위 : 명)	자격취득인원 (단위 : 명)	훈련예산 (단위 : 만 원)	직업훈련교사 (단위 : 명)
2009	3,537	2,740	37억1,000	119명
2008	3,470	2,693	36억7,400	107명
2007	3,279	2,506	32억7,400	90명
2006	3,273	2,870	28억7천	90명
2005	3,556	3,448	23억1,500	90명

최근 10년간 소년원생에 대한 직업훈련의 기본원칙 및 방향, 기대효과의 변화 및 교육 방식, 교육내용, 교육기자재 등의 변화와 사업별·품목별 예산 추이는?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기본원칙 및 방향은 00년대 초반에는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예기능사를 양성하였고, 최근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취업을 상호 연계한 현장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출원 후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직업훈련을 통한 기대효과는 소년원학생들에게 근로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전문자격 및 취업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 재 비행을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소년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실시, 고급 기술훈련실시 등 직업훈련의 단계화 추진, 화성 및 청송직업훈련교도소의 전문 직업훈련을 통한 기술자격 취득 교육 등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직업훈련 교육 수료생 1인당 자격취득 수 : 01년 0.7개에서 '09년 1.3개로 약 1.9배 증가

○소년원 직업훈련은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체 현장실습 및 통근취업 등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기 비율 30:70

○직업훈련 교육내용은 건축배관, 선반·금형, 전기용접 등 제조업 위주의 직종에서 최근에는 헤어디자인, 제과제빵 등 서비스직종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소년원 직업훈련 예산 추이>  
(단위 : 천 원)

연 도	사업별 예산	품목별 예산	
		자산취득비	재료비
2001	881,900	694,400	187,500
2002	867,500	680,000	187,500
2003	687,500	500,000	187,500
2004	687,500	500,000	187,500
2005	226,750	20,000	206,750
2006	286,600	50,000	236,600
2007	306,600	70,000	236,600
2008	306,600	70,000	236,600

연 도	사업별 예산	품목별 예산	
		자산취득비	재료비
2009	289,100	70,000	219,100
2010	579,000	70,000	509,000

최근 10년간 수형자 자격증별 취득 건수와 취득자, 총원대비 취득 비율은?

○최근 10년간 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는 3만 9,059명이며, 이중 84.8%인 3만 3,135명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각종 기술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수형자 자격증별 취득자 현황>

연도별	실시인원	자 격 취 득					
		계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계	39,059	33,135	2	32	59	2,584	30,458
2009	3,537	2,740		8	2	145	2,585
2008	3,470	2,693	1	3	3	269	2,417
2007	3,279	2,506		2	5	237	2,262
2006	3,273	2,870		8	21	264	2,577
2005	3,556	3,448		3	8	240	3,197
2004	3,818	3,651	1	3	3	311	3,333
2003	4,550	3,800		2	3	288	3,507
2002	4,605	3,998		1	7	327	3,663
2001	4,474	3,540		1	4	214	3,321
2000	4,506	3,889		1	3	289	3,596

최근 10년간 소년원생 등의 자격증별 취득 건수와 취득자, 총원 대비 취득 비율은?

○소년원학생이 취득한 자격증별 취득건수와 총원대비 취득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수)

연도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격기능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29,831	1,555	2,640	3,068	3,477	3,296	3,414	2,930	2,913	3,428	3,110
외 국 어		1,767	21	113	177	243	273	290	182	172	222	74
정 보 화		14,659	520	1,556	1,896	2,049	1,546	1,600	1,328	1,297	1,478	1,389
예 · 체 능		158	0	0	36	25	41	24	21	0	0	11
기술 자격	기능사	3,907	519	505	324	337	348	411	350	329	383	401
	민간자격	867	18	19	20	23	22	47	146	172	217	183

연도별 자격기능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검정고시	5,310	477	442	542	585	680	620	525	536	478	425
기 타	3,163	0	5	73	215	386	422	378	407	650	627
자격취득률(%)	137.6	48.1	78.5	98.6	137.6	164.4	194.0	190.0	212.0	242.1	229.0
교육인원(명)	21,685	3,232	3,361	3,111	2,527	2,005	1,759	1,542	1,374	1,416	1,358

※소년원학생 1인 2자격 취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학생 1명이 정보화, 기능사 등 자격증 기능별로 2~3개의 자격을 취득

※자격증별 세부내역

• 외국어 : PELT(Practical English Level Test, 실용영어시험), JLPT(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 일본어능력시험) 등

• 정보화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그래픽스운용기능사, E-test(정보활용실무능력 평가시험), 컴퓨터활용능력, ITQ(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 정보기술자격시험), 워드프로세스, 등

- 예체능 : 태권도, 유도, 댄스스포츠
- 기술자격

- 기능사 : 자동차정비, 특수용접, 일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미용, 피부미용, 제과, 제빵, 측량 등

- 민간자격 : 메이크업아티스트, 네일아트, 헤어칼라리스트, 두피모발 등

• 검정고시 : 중학교입학자격검정,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

- 기타 : 한자능력검정, 한국사능력검정 등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해 최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행 직업훈련 과정을 토대로 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은?

○직업훈련이 경제·사회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취업전망이 밝지 못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직종을 폐지하고, 기관별 특성화된 직업훈련, 고급 기술자격증 위주의 훈련 등 직업훈련의 단계화·전문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성 및 청송직업훈련교도소의 전문 직업훈련을 통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청송직업훈련교도소 : 자동차정비 등 9개 직종 연간 450명 훈련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컴퓨터응용기계 등 15개 직종 연간 650명 훈련

소년원생의 직업훈련에 대해 최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현행 직업훈련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은?

○직업훈련과정 개편 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직업훈련 유관기관·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현황 : 기관·단체 8개, 기업 13개

○앞으로도 직업훈련교육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출원생의 취업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출소자 등에 대한 취업·창업지원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출소자의 취업·창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률 저하, 우리사회의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고용 기피 현상 등이 출소자들의 구직활동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처우센터 건립을 통해 취업에 유리한 직종위주의 직업훈련과 창업자금 확대 시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9년 창업지원 36명(10억 9700만 원), 10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30억 원 신청

○또한 ‘1사 1출소자 고용운동’을 확대하고 출소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취업지원 등 조속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출소자 후원의 날’ 행사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09. 9. 2. 잠실 올림픽 홀에서 제1회 출소자의 후원의 날 개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협의회」 설치 및 구성 현황은?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협의회」는 2008. 4월부터 전국 교정시설별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기업체 CEO, 지역 노동부관계자, 취업·창업컨설턴트 등 외부전문가 및 교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1,206명(외부위원 984명, 내부위원 222명)이 수형자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건의, 상담,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지원조건과 지원내역, 지원실적은?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출소 3개월 전부터 직업심리검사, 취업·창업 관련 교육, 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소에 임박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취업박람회, 창업자금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수형자 취업 및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을 통하여 2009년도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수형자가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취업·창업 지원 실적

(단위 : 명)

연 도	2008년	2009년	2010. 3.	비 고
취업인원	672	1,107	232	
창업인원	15	58	17	

출소자 중 지원혜택자 비율현황은?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출소 전에 취업·창업 관련 교육, 상담, 직업심리검사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 형기종료 및 가석방 출소자 중 취업·창업 지원을 받은 인원은 출소자의 75.7%인 1만 9,539명입니다.

※형기종료 및 가석방 출소자 중 취업·창업 혜택 비율

(2009년 기준)

출소자 인원	취업·창업 교육 등 지원 인원	지원 비율
25,805명	19,539명	75.7%

취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현황은?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지원조건과 지원내역, 지원실적은? 출소자 중 지원 혜택자 비율현황은?

○「취업지원협의회」는 소년원학생들의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각 기관 소년보호위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원 등 10~30명으로 구성되며 전국 10개 소년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년보호위원 : 소년원학생의 교육활동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활동 (10.4 현재 1,463명)

※10. 4. 「취업지원협의회」 현황 : 10개 기관 193명

○소년원학생들의 구직등록, 기업체방문, 취업후견인 지정 등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09년도에 소년원 출원생 대비 26.9%의 소년원학생이 취업지원협의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09년도 취업지원협의회 지원 실적 : 736명(출원생 대비 26.9%)

-기업체방문 255명, 구직등록 289명, 취업후견인 지정 192명

○또한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08. 6. 「전국취업알선후원연합회」를 구성, ‘1사 1출소자 고용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총 729명에 대해 취업지원 및 총 5,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10. 4. 「전국취업알선후원연합회」 참여기업체 303개, 후원회원 621명 ⇒ 10. 12월 참여기업체 400개, 후원회원 800명으로 확대 추진

○09년 출소자 취업 및 창업지원 현황은 총 3,452명이며, 취업 후 1년간 후원회원과 연계, 안정된 취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09. 취업 후 사후관리 지도 대상자 총 5,880명

출소자 등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라 취업 또는 창업 후 현황은?

○출소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한 인증마크 부착 등 취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출소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를 극복하려는

출소자들의 근로의지가 부족하여 장기간 취업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09년부터 미소금융중앙재단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출소자의 창업지원의 경우

대상자의 사회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및 창업지원 현황 자료는 다음 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취업 및 창업지원 현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5년간 취업알선 현황

(단위 : 명)

직종 연도별	계	목공	미장공	철근공	용접공	전공	설비공	공원	정비공	정보통신	이미용	종업원	서비스	농축산	수산업	노무직	운전	사무직	경비원	기타
2005	3,373	65	36	80	55	34	47	242	43	12	25	151	140	30	9	1,197	683	227	33	264
2006	3,281	90	56	69	60	31	57	191	26	12	8	200	199	34	14	1,010	761	269	26	168
2007	3,387	123	50	98	88	40	116	210	31	10	8	196	224	32	12	923	731	136	21	338
2008	3,335	85	32	75	59	20	103	164	32	21	24	214	163	38	12	1,115	707	81	41	349
2009	3,422	61	30	44	47	19	90	241	26	8	18	344	187	33	24	994	791	92	31	342
계	16,798	424	204	366	309	144	413	1,048	158	63	83	1,105	913	167	71	5,239	3,673	805	152	1,461
비율(%)	100.0	2.5	1.2	2.2	1.8	0.9	2.5	6.2	0.9	0.4	0.5	6.6	5.4	1.0	0.4	31.2	21.9	4.8	0.9	8.7

□출소자 창업지원 실적 : 36명

(단위 : 명)

구분	의뢰인원	이월인원	개시인원	종료인원	현재원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비고
인원	81	0	36	2	34	1,970,000	1,970,000	

취업·창업지원 관련 실태조사 등 법무부가 분석·평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한 출소자의 취업근속기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알선

(단위 : 명)

기간 연도별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소계	1월 미만	1월이상 2월미만	2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4월미만	4월이상 5월미만	5월이상 6월미만	소계	6월이상 7월미만	7월이상 8월미만	8월이상 9월미만	9월이상 10월미만	10월이상 11월미만	11월이상 12월미만	1년 이상
2005	2,936	1,683	355	272	334	234	261	227	1,253	240	214	160	207	171	261	
2006	2,724	1,636	318	267	254	284	262	251	1,088	277	216	182	156	129	128	
2007	3,588	1,412	111	230	234	267	268	302	2,176	261	242	235	325	231	267	615
2008	3,527	1,266	77	139	172	217	320	341	2,261	392	310	278	211	122	492	456
2009	3,258	864	47	109	106	151	192	259	2,394	435	310	238	235	143	573	460
계	16,101	6,877	909	1,018	1,102	1,156	1,307	1,385	9,224	1,611	1,299	1,101	1,143	806	1,732	1,532

○출소자 취업과 관련, 실태조사 등 법무부가 분석·평가한 자료는 07년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발표한 『출소자 취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출소자 취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붙임)

○다만 붙임자료는 내용이 방대하여 요구하신 위원님께만 제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은 09년부터 시작하여 사업 초기 단계로 현재 분석·평가한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재소자 직업 교육방식, 교육 내용, 교육기자재에 대한 예산 투자 및 변화 내용은?

<최근 5년간 수형자 직업훈련·예산 변화 내용>

연도	훈련인원 (단위 : 명)	자격취득인원 (단위 : 명)	훈련예산 (단위 : 만 원)	직업훈련교사 (단위 : 명)
2009	3,537	2,740	37억1,000	119명
2008	3,470	2,693	36억7,400	107명
2007	3,279	2,506	32억7,400	90명
2006	3,273	2,870	28억7,000	90명
2005	3,556	3,448	23억1,500	90명

수형자 직업훈련 실시로 실질적인 고용 실적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근거자료는?

○2009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직업훈련 수료 출소자의 33.1%가 취업을 하였습니다.

※직업훈련 수료 출소자 취업 및 창업실적

(단위 : 명)

출소연도별	출소인원	취업 및 창업인원	취업률(%)	비고
계	4,959	1,643	33.1	
2006	1,322	528	40	
2007	1,860	684	37	
2008	1,777	431	24.3	

※취업인원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업체에 취업한 인원으로 일용근로자나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체 취업인원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임

(박준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민간법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이 출소자의 재범률

○수형자 직업훈련은 영등포교도소 등 27개 기관에서 자동차정비 등 48개 직종에 대하여 3,700명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2년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컴퓨터가공 등 15개 직종 650명, 청송직업훈련교도소는 자동차정비 등 9개 직종 450명에 대하여 1년에서 2년 과정으로 전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직업훈련 관련예산은 37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향후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도 더불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직업훈련수료 출소자의 취업·창업 실적을 지속적으로 조사, 파악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수형자 직업훈련이 실질적인 고용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축소에 크게 기여하고 출소자의 재범방지과 건전한 사회복지 등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갱생보호사업은 무의탁·무연고 불우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안정된 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한다면 재범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범고위험군인 무의탁 출소자 등을 보호하는 생활관 시설의 확충과 그에 따르는 인력 증원 및 국고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은 경영활성화를 통한 자체수입 확보노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하되,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한계를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갱생보호사업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열악한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인건비 및 사업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국고보조금 증액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억 6,700만 원, 국회 4억 9,400만 원 증액 (총 7억 6,100만 원 증액, 전년 대비 10.7% 증가)

○또한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해 복권기금 등 민간자원을 적극 유치하고 출소자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정례화 할 계획입니다.

외국의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은 일본 70%, 홍콩 90%, 대만 90%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2009년도 공단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이 56.5%에 불과함.

국가차원에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고 출소자의 재범방지 등에 효과적인 동 사업을 재정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생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범죄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고,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09년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 7억 660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으며, 복권기금 및 휴면예금 등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9년 국고보조금 70억 9000만 원에서 10년 78억 5000만 원으로 증액 (전년 대비 10.7% 증가)

○앞으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갱생보호 민간법인의 경우 재정여건이 취약함에도 자체 재무구조 대비 평균 국고보조율이 30%정도인데 타 복지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 70%를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동 단체들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생보호민간법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비율이 타 복지사업에 비해 국가보조율 지원이 미미하므로 예산 지원과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향후 계획은?

○현재 갱생보호민간법인의 국고보조율은 42.6%로 타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 70%에 비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 비율을 증액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09년 민간법인 예산 7억 8,722만 원 ⇒ 10년 8억 9,590만 원으로 1억 868만 원 증액(13.8% 증가)

○또한 갱생보호사업이 사회복지 분야임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지 않아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 등을 받지 못해 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 갱생보호사업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 현재 국회계류 중(09. 6. 민주당 김춘진의원 발의)

○갱생보호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출소자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갱생보호사업을 통하여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를 방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갱생보호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생각과 계획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통한 재범 방지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갱생보호사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법무부와 공단에서는 06년부터 노란리본캠페인을 전국적 행사로 전개하고 있으며, 09년부터 출소자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출소자 재범방지 사업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고보조금을 전년 대비 10.7% 증가한 7억 6,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출소자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가 있는지?

○출소자 일자리 제공관련 사회적 기업 인증 사례는 없으나, 08년부터 취업알선후원연합회를 구성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1사 1 출소자 고용’ 운동 전개 및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체에 대한 ‘일터나눔 HUG 인증마크제’를 시행하여 출소자 고용 운동에 솔선수범하는 기업체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와 출소한 일자리 제공관련해서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장관의 생각은?

○법무부에서는 현재 전국 6개 소년원학교에서 제과·제빵, 카일렉트로닉스(자동차정비), 헤어디자인 등 10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부와 연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한 뉴-스타트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잡스쿨(job school)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9년도 직업체험 학습프로그램 운영실적 : 청년층 뉴-스타트 65명, 잡스쿨 138명

※작업별 취업현황

(2010. 4. 6. 현재)

구분	계	직영작업	위탁작업	노무작업	관용작업	훈련교육
1일평균 취업인원	19,441 (100%)	2,685 (13.8%)	6,181 (31.8%)	1,260 (6.5%)	5,556 (28.6%)	3,756 (19.3%)

미지정자가 인권위 진정, 고소, 고발 등을 남용하여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도관의

○또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한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알선 및 출소자 취업희망프로그램 등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부와 적극 협력하여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송직업훈련교도소가 오지에 있어 일자리 연계효과가 적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생각은?

○청송직업훈련교도소가 오지에 위치하여 일자리 연계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송직업훈련교도소는 2004년 사회복지법의 폐지에 따라 청송제1감호소의 기능을 전환하면서 개청하였지만, 훈련강사의 섭외 곤란, 관련 기업체 부족 등으로 취업연계에 애로가 있습니다.

청송직업훈련교도소의 타 지역 이전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지난 3월 16일 청송지역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청송직업훈련교도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청송직업훈련교도소 출소예정자의 일자리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수형자의 수는 어느 정도이고, 이 중 미지정자의 수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2010년 4월 6일 현재 전체 수용자 4만 8,055명 중 수형자는 3만 2,397명이며, 이 중 취업인원은 1만 9,441명(60%), 미취업자는 1만 2,956명(40%)입니다.

○다만 미취업자 가운데 환자, 이송대기자, 고령자 등을 제외한 순수 미지정자는 4,056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12.5%입니다.

업무수행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과거 일부 그러한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으로 수용생활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미지정 수형자에 대하여 질병이나 타수용자의 악폐 감염, 타수용자 위해 가능성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정역을 부과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각 교정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정역을 부과할 수 있는 교도작업장이 부족하여 미지정 수형자 모두에게 정역을 부과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교도작업장을 늘려 나가고 건설한 민간 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미지정 수형자도 충실히 정역에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과되는 정역은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정역 부과 시 재소자의 직업과 적성을 고려하여 부과되는지?

○정역으로 부과하는 교도작업의 종류는 관용작업, 직영작업, 위탁작업, 노무작업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 관용작업 : 취사, 영선 등 교정시설 운영을 위한 작업
  - 직영작업 : 목공, 인쇄 등 직접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작업
  - 위탁작업 : 전자부품조립 등 외부업자가 참여하는 작업
  - 노무작업 : 외부통근작업, 구외공장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작업
- 작업은 수형자의 직업적성검사와 장래희망을 고려하여 출소 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정하

고 있습니다.

장관은 교도소의 정역이 출소자의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와 관련된 법무부의 계획은?

○정역인 교도작업은 근로의식 및 직업의식 함양에 기여하며 출소 후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법무부에서는 취업 전망과 맞지 않는 교도작업 직종은 폐지해 나가는 대신, 취업유망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출소 후 취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우량 기업을 교도작업에 참여토록 하는 ‘맞춤형 교도작업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으며,

○참고로 교정시설 직업훈련 이수자의 출소 후 취업률은 현재 33.1%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법무부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의 ‘연차별 장애인 고용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정원(검사,公安직 제외) 대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3%를 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연차별 목표는 2010년 2.7%, 2011년 2.86%, 2012년 3.01%입니다.

○2007년 4월 현재 법무부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133명(중증 15명, 경증 118명)으로 고용률은 2.93%로 이는 금년도 목표 2.7% 대비 108.5%(11명 초과)입니다.

○앞으로 법무부에서는 법정 의무 고용목표비율인 3%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법무부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2010. 4. 7. 현재)>

(단위 : 명, %)

장애인 고용 목표			장애인 고용현황				
대상인원	부처목표 (2010년)	의무고용인원	합계	중증	경증	고용률	목표 달성률
4,545	2.7%	122명	133명	15	118	2.93%	108.5%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직종 : 검사,公安직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직공무원

**(최영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0. 4. 개관 예정인 「여성 출소자 지원 센터」 사업 계획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출소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여성지원센터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무연고·무의탁 여성 출소자를 위한 무료숙식 생활관과 직업훈련 교육실, 전시 및 체험실, 상담실, 생활도예실 등

을 운영하여

○제과제빵, 네일아트, 생활공예, Barista(커피메이커) 등 취업이 용이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한편,

○상담·심리치료·학업 등 재사회화 교육 및 사후지도를 통해 재범 없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첨 : 여성지원센터 사업계획서

**(흥희덕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 단속이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었다는 근거 자료

○불법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은 소위 3D업종의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부는 최근 매년 2만 8000여 명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여 출국조치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2만 9000여 명의 불법체류자를 자진출국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한 숫자만큼의 일자리가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중 상당수는 국내 근로자로 대체되었다고 추정됩니다만,

○대체인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없고 조사 자체가 어려운 현실에서 정확한 비율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외국인이 국민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언론기사 (발췌)

○세계일보(10.1.27.) “국내 취업 외국인근로자 수 따져보니 ----” 제하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외국인력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들은 주로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분야에서 국내 단순직 인력을 대체한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건설업 일용직, 임시직의 국내 인력 비중은 07년 상반기 50.13%였으나 08년 상반기에는 46.47%로 급락했다. 이에 비해 외국인력 비중은 같은 기간 5.71%에서 9.13%로 경증뒀었다. 음식·숙박업에서도 국내인력 비중이 이 기간 38.15%에서 37.35%로 하락한 반면 외국인력 비중은 3.26%에서 4.78%로 높아졌다.  
 ○동아일보(10.1.6.) “무자격 단속강화 ---- 한국인 수요 늘었어요” 제하  
 - 아홉 살난 딸을 둔 한국인 조종수 씨(51세)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중국동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중국동포는 바깥 돈을 벌어

돌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아이 학원도 보내야 한다”며 “한국사람들이 먼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희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재소자에 대한 교정·직업교육 과정 및 출소 후 정착 등 사후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 마스터플랜

○법무부는 엄정한 형벌 집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한편,

○범법자가 자립의지와 기반을 갖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정착할 수 있도록 입소에서부터 출소 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대상자별로 다각적인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형자 교정·직업교육 및 출소 후 사회복귀지원 사업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형자 교정·직업교육 및 출소 후 사회복귀지원 사업 현황

I. 개요

○법무부는 엄정한 형벌 집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한편, 범법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지원 정책과 프로그램 수행

○교화·개선을 위한 인성교육은 물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자립의지와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단계별·대상자별 프로그램 개발·시행

II. 수형 단계에서의 교정·교화·직업훈련

1] 기본 방향

○자활능력 배양 및 사회정착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분류심사를 통한 개별 처우, 특성에 맞는 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 교화 정도에 따른 단계별 개방 처우로 사회적응능력 배양

○출소(원) 예정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창업지원 확대 및 갱생보호사업과의 연계 강화

※별첨 1 「수형자 처우 흐름도」, 별첨 2 「소년원생 처우 흐름도」 참조 : 입소(원)에서부터 출소(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 실시

2] 교도소 수형자에 대한 프로그램

□경비등급별 분류 수용

가. 추진 목적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인성과 특성, 교화가 능성 유무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경비등급별 수용 처우 기준 마련

○해당 교정시설에 수용, 단계별 처우를 통하여 자활의지 고취 및 안정된 수용생활 유도

※전국의 교정시설을 개방(S<sub>1</sub>) · 완화경비(S<sub>2</sub>) · 일반경비(S<sub>3</sub>) · 重경비(S<sub>4</sub>) 시설로 구분, 단계별 처우 실시

나. 주요 내용

○형 확정 수형자 분류심사

-수형자의 도주 등 위험성에 따라 경비등급을 S<sub>1</sub> · S<sub>2</sub> · S<sub>3</sub> · S<sub>4</sub>급으로,

-범죄성향의 진전, 개선정도 및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급을 1 · 2 · 3 · 4 급으로,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직업훈련 · 학과 교육 · 작업지도 · 관용작업 등으로 구분

○경비등급별 수용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수형자를 경비등급별 해당 시설에 수용, 처우급별 적정 처우 실시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목적

○전문학사 · 대학과정 등 각급 학력자격 취득을 위한 학과교육과 첨단 유망직종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능력 배양

○인성교육을 비롯하여 외국어 · 정보화 등 출소 후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을 중점 실시, 수형자에게 자신감 부여

○성폭력 · 마약사범 등 정신성적 범죄자와 상습규율위반 수형자에 대한 전문 처우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성 함양 및 재범 예방 도모

나. 주요 내용

① 인성교육

○전 수형자 대상으로 최초 6개월 내 1회, 이후 3년에 1회 이상 실시

○감수성 훈련, 인간관계 회복, 심리치료, 집단 상담, 도덕성 회복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9년 인성교육 실적 : 335회 9,118명

② 교화방송국 설치 운영

※과정별 교육 인원

○세계 최초로 전국 동시 방영이 가능한 교화방송국 개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영상편지, 출소자 성공다큐, 법교육 영상 강좌 등 제작 방영으로 수용자 심성순화 및 사회복귀 의욕 고취

※2010년 상반기 ‘라디오 교화방송’ 개설 예정

③ 성폭력 수형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성폭력사범 중 동종범죄 재범의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 대상 정신 및 심리치료를 재범 예방

○형 확정 후 6개월 이내의 성폭력수형자를 대상으로 각 교정기관에서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영등포교도소 등 4개 기관을 아동성폭력사범 집중교육기관으로 지정, 성 인지능력과 사회성 배양 등을 위한 집중 훈련 실시

※신축 중인 영등포교도소에 100명 수용의 ‘교정심리치료센터’ 병설(11.6.), 아동성폭력사범을 집결 수용하여 6개월 과정의 집중 심리치료 실시

④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치료재활공동체 등과 연계하여 운동요법, 상담, 시청각 교육 등을 병행한 재활교육 실시

※2009년 132회 1,181명 재활교육 실시

⑤ 상습규율위반자 집중교육 실시

○상습규율위반자, 처우곤란자 등을 청송제2교도소와 홍성교도소에 집결 수용

○분노조절, 대인관계 개선 등을 위한 감정통제훈련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2주 과정의 아리랑 캠프 운영

아리랑 캠프 (我理郎 Camp)

- 상습 규율위반 수형자 대상, ‘나를 발견하는 기쁨’을 의미하는 자아회복 특별 프로그램으로  
- 성격 심리검사, 분노 조절 훈련, 출소 후 생활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등으로 구성, 심성순화 및 대인관계 개선 도모

⑥ 학과교육

○사회 내 고학력 추세에 부응, 수형자의 학력등을 감안한 학과교육 실시로 자신감 부여

○초 · 중 · 고등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과정(방통대, 독학사 과정) 운영

구 분	교육 기관	교육인원	비 고
초 · 중 · 고등과 과정	안양 등 45개 기관	871명	

구 분	교육 기관	교육인원	비 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김천소년도소	40명	
전문대학 위탁교육	청주·순천교도소	70명	30 + 40
방송통신대학과정	여주 등 4개 기관	77명	12개 학과
독학사 과정	대전 등 11개 기관	170명	12개 분야

※전문대학 위탁교육

- 청주교도소(주성대학 창업경영과 30명)
- 순천교도소(청암대학 호텔외식조리과 40명)

※2009년 교육운영 실적 : 검정고시 합격 548

명, 전문학사 42명, 독학사 14명

⑦ 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

○국제화 시대에 부응, 수형자에게 회화 중심의 영어·일본어·중국어 교육 실시

※과정별 교육 현황

기 관	과 정	교육기간	인 원	비 고
의정부교도소	영어·일본어	1년	60명	30 + 30
여주교도소	중국어	"	30명	
목포교도소	중국어	"	30명	

○전국 45개 기관에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 실시

※09년 워드프로세서 1,106명, 컴퓨터활용능력 112명 자격 취득

⑧ 직업훈련

○수형자의 적성 등을 반영, 사회 기업체의 수요가 높은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능력 배양

※영등포(교) 등 27개 기관에서 48개 직종, 연간 3,700명 훈련

○전문직업훈련소 훈련 실시

- 청송직업훈련교도소 : 07. 7.부터 자동차 정비 등 9개 직종, 연간 450명 훈련

※수료생 중 62명, GM대우정비사업소 등 50개 관련업체 취업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09. 6.부터 컴퓨터 응용 가공 등 15개 직종, 연간 650명 훈련

⑨ 교도작업

○수형자에게 작업을 통한 근로정신 함양과 기술 습득 후 건전한 국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중간처우의 집 운영 현황

구 분	서울(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기 관	안양(교)	춘천(교)	마산(교)	천안(개)	청주(여)	순천(교)
인원(명)	10	10	8	180	20	10

있도록 하기 위해 정역을 부과

○전국 50개 교정기관에서 직영·위탁·노무·관용 작업에 1일 평균 2만여 명 취업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시행하는 외부통근작업은 1일 평균 1,300여 명 취업

□모범수형자 등 사회적응능력 배양

가. 추진 목적

○교정시설 장기 수용으로 변화된 사회의 실상을 직접 체험토록 하여 출소 후 안정된 정착 유도

○가족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소외된 가족관계 회복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 도모

나. 주요 내용

① 중간처우의 집 운영

○안양교도소 등 5개 기관의 담 밖에 중간처우의 집을 설치

※천안개방교도소에는 사회적응훈련원 설치 운영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출소 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부통근 작업과 병행하여 생활 중심의 교육훈련 실시

## ② 귀휴

○모범수형자에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해 형기 중 일정기간 동안 가족 등과 함께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가

○6개월 이상 복역, 형기의 1/3(21년 이상 장기형 및 무기형 7년) 경과한 교정성적 우수자 등 대상 연간 20일 이내의 기간 시행

※2009년 귀휴 시행 인원 : 1,000명

## ③ 사회견학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사회 내 기업체, 문화유적지 등 견학 및 사회복지시설 등 봉사활동 병행

※2010. 3. 26. 교정기관별 모범수형자,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으로 '보라미 봉사단' 구성, 사회복지시설·지역주민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 실시

○변화된 사회의 실상 체험 및 봉사활동을 통한 사랑나눔과 인간존중의 정신 배양

※2009년 사회견학 시행 인원 : 2,994명

## ④ 가족만남의 날 행사

○교정시설 내 개방된 장소에서 모범수형자, 교령자, 장애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5인 이내의 가족 등과 함께 자유로운 접견 허용

○가족과의 유대 증진 및 미래 설계 기회 등 부여

※2009년 가족 만남의 날 운영 실적 : 6,807명

## ⑤ 가족만남의 집 운영

○모범수형자에게 교정시설에 설치된 가족 만남의 집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5명 이내의 가족과 함께 1박 2일간 숙식 허용

○소원해진 가족관계 회복 및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안정된 수용생활 유도

※2009년도 가족만남의 집 운영 실적 : 795명

## □출소예정자 취업·창업 지원

## 가. 추진 목적

○출소예정자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 출소 후 방황기 없이 안정된 사회 정착 도모

○주요 창업아이템 보유자가 출소 후 창업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창업자금 대출, 일자리 창출 및 성공적 사회복귀로 재범 예방

## 나. 주요 내용

## ① 출소자 취업지원체계 구축

○노동부·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 등의 취업 관련 부서장과 대학교수 등 17명의 전문가로 '법무부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 구성

- 교정기관의 '수형자 취업 창업지원 협의회'의 활동 지원 및 수형자 취업·창업을 위한 주요 정책 지원 등 업무 수행

※2010. 2. 3. '법무부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 구성

## ②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개최

○법무부와 노동부가 공동 주최하는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개최

- 2010. 4. 27. 4개 지방교정청에서 전국 규모로 동시 개최, 교정기관 1社1友 결연업체 등 150개 기업체 참가 예정

- 가석방예정자 등 1,400여 명이 참가, 현지 면접 등을 통해 채용여부 등 결정

○민·관 협력으로 출소예정자 취업 확대 및 사회적 관심 제고

※2009. 10. 천안개방교도소 사회적응훈련원에서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개최, 131명 취업

## ③ 소액 창업자금 대출사업 시행

○보건복지가족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금 3억 원 확보, 출소예정자 중 우수 창업아이템 보유자 등 대상 창업자금 대출

- 2010. 2. 3. 창업자금 대출 대상자 13명 선정, 출소 후 창업 시 각 2,000만 원의 창업자금 지원

※2010. 3. 미소금융 중앙재단에 창업자금 10억 원 지원 요청

## ④ 수형자 종합 일자리 정보망 운영 추진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수형자 종합 일자리 정보망' 구축(10. 6)

- 구인·구직 정보 및 출소예정자 중 취업희망자의 기술자격 보유 내역, 창업교육 이력 등 등록

- 기업체 등과 상시 연계로 수형자 취업 확대 추진

## ③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

## □「사회복귀목표시스템」 운영

○소년원 입원 시부터 퇴원까지 체계적 지도·관리

○개인적 특성 및 환경을 고려, 학업연계, 진학·취업 등 개별처우에 따라 출원 후의 사회복귀 최종목표 및 진로방향 설정

○사회복귀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고려하여 출원시기 및 방법 결정

□사회복귀 적응력 제고 위한 「교육·가족지원」 추진

○중등교육, 수능준비, 검정고시 이외에도 통학 및 학원수강 실시

○대학입학 등 상급학교 진학생, 성공가능 출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09년 졸업장취득(108명), 검정고시합격(425명), 상급학교진학(166명), 편입학(189명), 통학(9명), 학원수강(22명), 장학금 지급(79명, 5,250만 원)

○가족찾기, 가정관 합숙, 주말가정합숙, 무의탁생 결연, 문신제거 시술

※09년 가족찾기(50명), 가정관합숙(2,418명), 주말가정합숙(196명), 결연(606명), 문신제거(2,305명)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 활성화

○취업환경 분석, 수요조사를 통한 직종 개편 및 취업유망 직종 신설, 민간 인적·물적자원 인프라를 활용한 취업지원 확대

○통근취업, 취업알선, 구인업체 방문, 취업후견, 산업체현장실습 등

※09년 통근취업(30명), 취업알선(335), 구인업체방문(255), 취업후견인 지정(192명), 산업체현장실습(275)

○취업 후의 적응력 제고를 위하여 재원기간 중 노동부와 연계한 ‘청년층 뉴-스타트’, ‘잡스쿨’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09년 청년층 뉴-스타트 65명, 잡스쿨 138명

□성공적 사회정착 위한 「자립지원」 확대

○사랑의 리퀘스트(어린이재단) 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 발굴 등 불우 출원생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급

※09년 사랑의 리퀘스트(14명, 4,374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53명, 개인별 18~40만 원 차등 지급)

□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지원협의회」 운영

○소년원 취업담당 직원, 민간봉사자인 소년보호위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원 등 대내외 취업관련 전문가 10~30명으로 구성

○‘사후지도분과’ 및 ‘취업알선분과’로 구성·운영

※구성 현황 : 전국 10개 소년원에 설치, 총 193명 활동

□「(재)한국소년보호협회」를 통한 사후지도 강화

○소년원생 교육지원, 소년원 출원생 취업·창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공익법인 설립·운영(98.12.~현재)

○창업보육기업 운영을 통한 출원생 채용, 현장실습, 소자본 창업 등 지원

※창업기업 : 푸르미카서비스(자동차정비), Nc-Wiz(인쇄업), 오션베이커리(제과제빵)

○무의탁 출원생 및 취업생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관’, ‘그룹홈’ 운영

※09년 전국에 6개 자립생활관 운영, 10년 중 전주·춘천 그룹홈 운영 예정

Ⅲ. 출소 후 단계에서의 갱생보호사업

□기본 방향

○무의탁·무연고 불우출소자를 정신적·물질적으로 원조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 방지

※실형 복역 출소자 외에 소년원생, 보호관찰대상자 등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지원

○일회성·소모성 급부에서 벗어나 자립생활능력을 배양하고 가족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생활터전 및 생계수단 마련 지원에 주력

□주요 사업 현황

가. 담당 기관 및 절차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갱생보호민간법인이 사업 주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1본부, 14개 지부, 1센터, 7개 지소

※민간법인(7개) : 담안선교회, 세계교화갱보협회, 빠스카효과복지회, 뷰티플 라이프, 양지뜸, 열린낙원 한국교화복지재단

○사업 전개 절차는 별첨 3 「갱생보호사업 흐름도」 참조

나. 주요 사업

○불우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숙식제공, 주거지원, 긴급원호 등 다양한 지원사업 전개

<최근 3년간 갱생보호사업 실적>

구분	계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숙식 제공	주거 지원	긴급 구호	사전 면담	사후 관리	재사 회화	기타
2007	65,262	3,601	1,548	0	3,240	152	3,000	22,326	9,239	5,441	16,715
2008	66,896	4,487	1,694	0	3,245	152	3,200	23,945	8,348	4,513	17,312
2009	68,374	4,613	1,662	30	3,155	152	4,244	22,110	9,398	5,427	17,583

① 취업알선 : 취업을 희망하지만 범죄 전력자라는 사회적 편견 및 자질과 능력 등의 개인적 장애, 기타 사유 등으로 자력으로는 취업이 곤란한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본인의 희망과 적성·능력을 고려하여 범죄예방위원, 갱생보호후원회원, 기타 독지가 등과 연계, 직장을 알선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직업훈련 :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갱생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희망·적성·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과 자영업에 용이한 직종을 알선하고 직업전문학교·일반학원에 위탁교육 실시

③ 창업지원 : 2009년부터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아 1인당 4,000만 원까지 무담보 대출

④ 숙식제공 : 무연고·무의탁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생활관(22곳)과 민간갱생보호법인 생활관(7곳)에서 최장 2년간 숙식과 의복 등을 제공

⑤ 주거지원 : 범죄와 구금으로 해체된 출소자의 가정기능을 복원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출소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와 연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출소자에게 지원(06년부터 15년까지 매년 150호씩 총1,500호)

⑥ 긴급구호 : 질병과 사고, 경제적 궁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긴급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치료비, 구호양곡, 기타 금품 등을 지원

⑦ 사전면담 : 출소 예정 재소자에 대해 출소 1개월 전에 교정시설을 직원 또는 사전상담 전문위원이 방문, 면담을 실시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한 갱생보호 실시

⑧ 사후관리 : 원호 담당 직원 또는 범죄예방위원, 후원회원 등이 1년의 기간 동안 방문·통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대상자의 선행을 지도·장려하고, 가정·주거·교우환경 등의 조정과 개선을 통해 사회복귀 유도

⑨ 재사회화 : 각종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등을 통해 자아정체감과 문제해결력을 증진케 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행정처리절차 등 교육을 통해 사회적응력 향상

⑩ 기타 : 출소자가 조속히 자립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결연, 호적등록 취득, 의료시혜, 합동결혼식 등을 통해 사회복귀 촉진

□「일자리 만들기」 관련 특별 사업

가. 1사 1 출소자 고용' 운동 전개

○출소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단 내 민간인으로 구성된 취업알선후원회를 활용하여 1사 1출소자 고용'운동 전개

○지부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취업알선후원회를 통합하여 전국취업알선후원연합회를 구성(08. 6.), 출소자 HUG기업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고용기업체 인프라 구축

※출소자 HUG기업체 배가운동을 통해 참여기업체 지속적 확대 추진 08년(537명) → 09년(613명) → 10년 800명 이상으로 확대

나.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체 일터나눔 HUG 인증마크제 시행

○출소자 고용 운동에 솔선수범하는 기업체를 격려하고 출소자 고용기피 인식 해소를 통한 고용기업체 확대

○09. 12. 제1호점(우신택스, 인천시 소재), 10. 2. 제2호점(동선산기, 창원시 소재) 인증마크 부착, 10. 5. 제3호점 발굴 예정

다. 전문처우센터 건립

○여성출소자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여성지원센터 건립 추진

※10. 4. 개관하는 화성센터에는 제과제빵 교육 시설 및 판매 cafe 직접 운영

○무의탁·무기능 출소자의 체계적 기능취득 지원과 취업알선 등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취득전문처우센터 건립 추진

※09. 12. 복권기금 2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건립 추진 중으로 10. 12. 개관 예정

라. 출소자 창업지원 확대

○09년 미소금융중앙재단과 연계하여 휴면기금 10억 원 확보,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없어 창업을 하지 못하는 출소자에 대해 1인당 최대 4,000만 원씩 무담보 창업자금 대출 사업 전개

※10년 창업지원 확대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휴면기금 30억 원 신청

마. 주거지원사업 전개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 출소자를 위해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06년부터 매년 150호씩 15년까지 1,500호의 임대주택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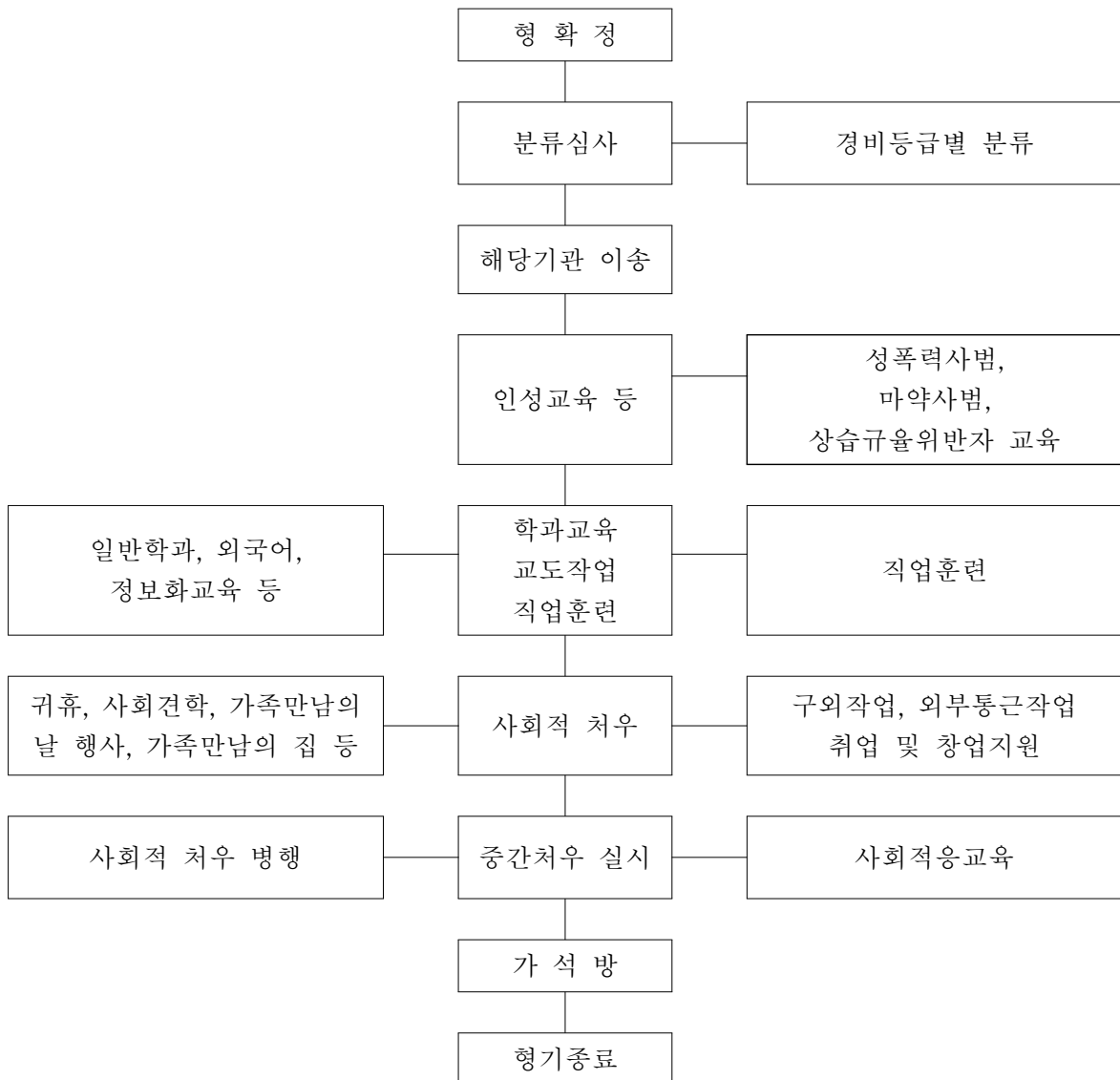
※09년까지 총 606호 지원

- 바. 출소자 후원의 날 행사 개최  
 ○출소자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대국민 참여 제고를 통한 출소자 지원 기금마련을 위해 ‘출소자 후원의 날’ 개최  
 ○용서와 화해를 의미하는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사랑나눔 콘서트 등을 통해 갱생보호사업 활성화 도모  
 ※09. 9.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후원의 날 행사 개최, 후원회원·시민 등 3,000여 명 참석, 10. 9. 제2회 행사 개최 예정  
 □소년원생에 대한 출원 후 사후관리 시스템 가. 임시 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실시  
 ○소년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

- 호관찰관 사전면담제’ 운영  
 ※09년 기준, 출원자(9·10호) 1,444명 중 950명(65.8%)이 임시퇴원으로 출원  
 ○교육과학기술부, 시·군 교육청 등과 연계한 복학주선, 교사 멘토링 실시 및 학업중단·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검정고시 지원  
 나. 퇴원자에 대한 「사후지도」 실시  
 ○퇴원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출원 후 6개월 동안(6개월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담임교사, 담당직원 등의 통신, 출석, 방문지도 실시  
 ※09년 사후지도 총 2,785명 실시(방문 179명, 출석 123명, 통신 2,483명)

<별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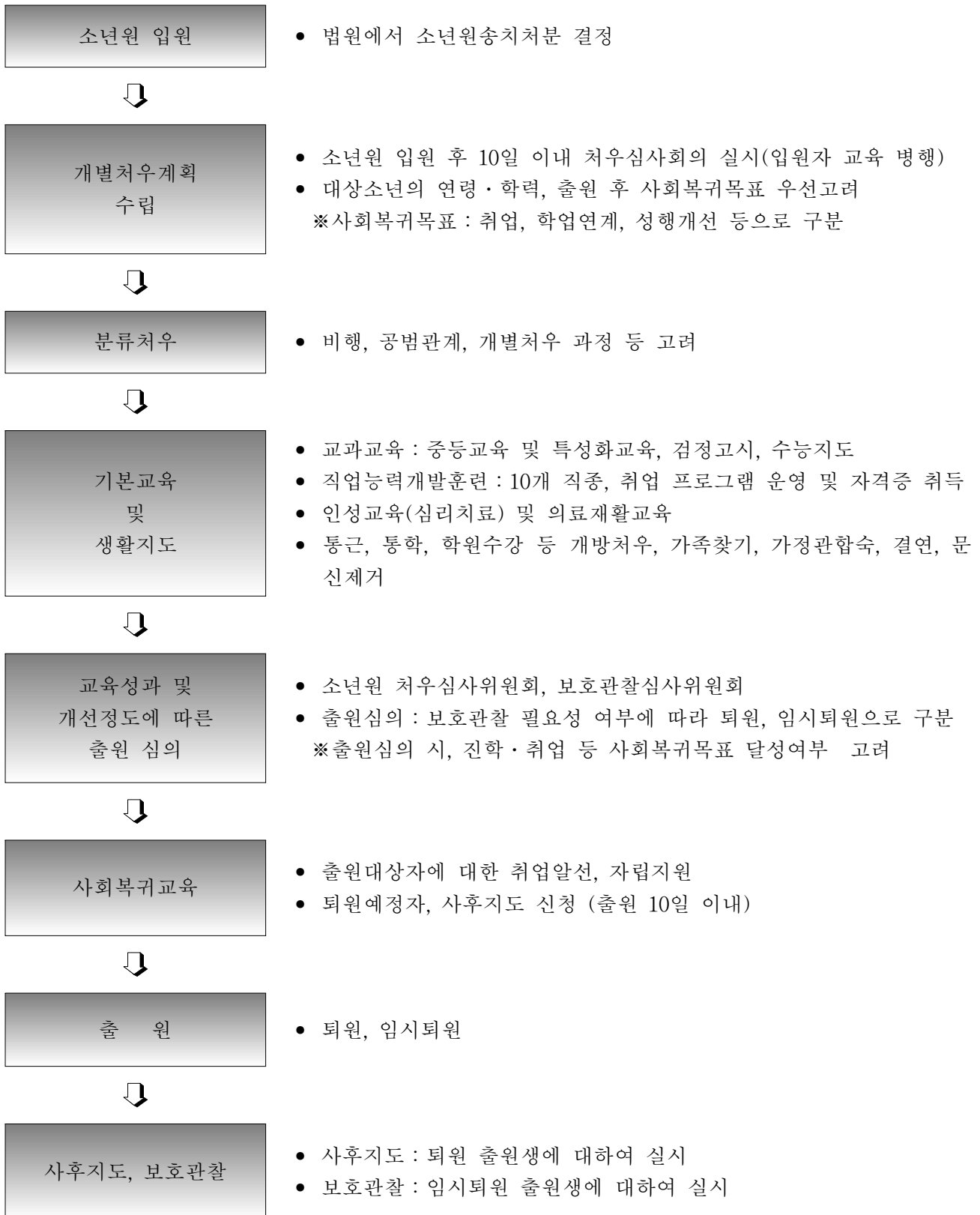
수형자 처우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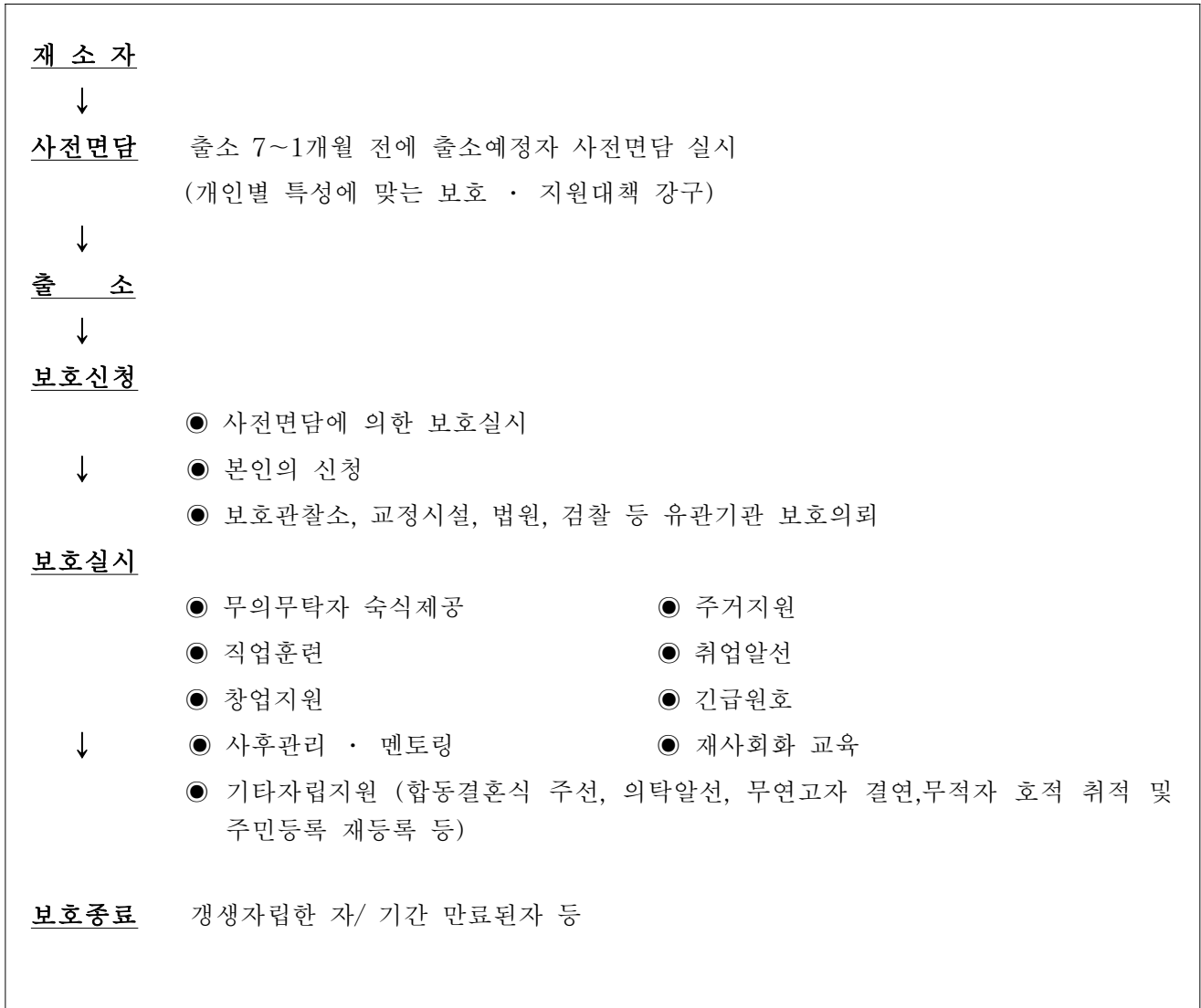
<별첨 2>

소년원생 처우 흐름도



<별첨 3>

갱생보호사업 흐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

(박준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

1) 문화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문화부 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일자리 TF」를 통해 신규일자리 발굴,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등 문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며, 동 결과가 2011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 방안

1)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이 중요함. 문

화부의 MICE 산업 육성전략은

○MICE산업은 관광산업 등과 연계할 경우 국민경제 성장과 소득·고용 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경쟁국들은 MICE 유치를 위해 경쟁 중입니다.

※일본 : 06년 총리주도하에 MICE 확대방안 발표(11년 아시아 1위), 2010년을 'Japan MICE Year'로 선정(09)

싱가포르 : 05년 산업통상부에서 「Tourism 2015」 발표(15년 105억 불 달성), 약 992억 원의 특별기금 조성, 복합리조트인 센토사월드, 마리나베이 개장(10)

홍콩 : MICE전담기구(MEHK) 발족(08),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우리 부는 유치 가능한 국제회의를 적극 발굴하고, 국제회의 유치·개최 및 홍보를 지원하며, 해외에 MICE 목적지로서 한국을 적극 홍보하여 한국으로 보다 많은 MICE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MICE 홍보대사 및 스페셜리스트를 임명하여 해외 유치활동 및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집중 해외마케팅인 MICE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2010~2012)하고, MICE 유치 윈스톱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며 해외 전담기지를 구축하는 등 G20, 한국방문의해 계기 MICE 유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컨벤션을 육성하고 국제적 수준의 MICE인프라를 확충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고 MICE선진국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MICE산업의 경쟁력을 13년에 세계10위, 18년 세계 5위권에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제도개선을 통해 창출이 예상되는 민간일자리  
 1) 부처별로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통해 창출이 예상되는 민간일자리(예상 시뮬레이션)는?

○문화부는 2010년도에 관광분야 민간투자 촉진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개발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례나 연구조사가 미비하여 산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관련 연구 등을 통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도관광 활성화 대책  
 1)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서 “독도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정부는 영토관리와 환경 보전 등 독도 관련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독도영토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도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08. 8)>

-기능 : 독도 ‘영토관리’와 ‘환경보전’, ‘교육강화’, ‘국제사회이행 증진’사업의 효율적 대응 위해 설립

-구성 : 국무총리, 우리 부(문화예술국), 교과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문화재청, 해양경찰청, 경상북도, 그 밖의 관계부처 등

○우리 부에서는 관광지로서의 독도에 대한 홍보와 이벤트 실시, 여행상품 개발 지원으로 국민의 독도 관광 참여를 높이는 한편 청소년 독도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독도로의 수학여행 우수사례를 공모, 시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정진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막걸리 세계화에 맞춘 음식문화 상품개발  
 1) 막걸리의 세계화를 위해 타 부처와 협의하여 활성화 시킬 방안은?

○문화부는 한국음식의 관광산업화를 위하여 국내외 주요 박람회에 참가하여 세계에 한국음식의 맛과 멋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걸리 산업을 포함한 한국음식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체험 관광상품 개발 및 음식관광박람회 계기 한국음식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막걸리 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문화체육관광부-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사업 시행주체 문제  
 1) 문화부가 실시하는 현업 방송인력의 재교육은 방통위와의 협의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방통위의 「방송영상전문교육 지원사업」에서 수행하는 현업방송인 전문교육 및 PD 재교육 프로그램운영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부장관의 생각은?

○08년 12월 국회 예결위 주재의 업무조정을 통해 문화부와 방통위 상호간 중복 가능성이 있는 방송제작인력 교육에 대한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방송영상 예비인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방통위에서는 방송영상 현업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업에 대한 교육으로 중복 문제가 제기된 방송연기자 재교육과정(3억 원)은 10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미반영되었으며,

○상호간의 업무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영화 스태프의 처우개선 문제

1) 영화 스태프의 열악한 처우와 관련한 문화부의 대책은?

○09.12월 전국영화산업노조에 의뢰하여 영화 스태프 임금체불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10.4월 말 완료예정), 임금 상습체불 제작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영진위 지원배제, 펀드투자 금지 등 제재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시행시 스태프 인건비의 우선 지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제작지원) 지원금의 25% 이상을 스태프 인건비로 집행 의무화?

(펀드투자) 메인투자프로젝트의 스태프 인건비 관련 별도계정 설치 의무화

\* 부분투자프로젝트의 경우 설치 권고사항

○영화계 노-사-정 협의 채널인 ‘영화산업협력위원회’\*의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지속 논의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추진 중입니다.

\* 전국영화산업노조(3), 한국제작가협회(3), 영화진흥위원회(1) 등 7명으로 구성(07~, 2개월에 1회 개최)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영화산업노조의 임금체불 신고 창구인 ‘영화인 신문고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04년부터 시행, 연간 50건 내외, 조사후 중재·소송지원 등 조치

(영진위 연 4000만 원 지원)

2) 영화 스태프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부와 협조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2008년 노동부에 고용보험 대상의 확대를 통해 영화 스태프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 등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부와 협의하여 영화스태프의 근무조건이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 2010년 문화부 재정지원 일자리 관련

1)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목표대비 86%를 달성하였다면 계획을 너무 낮추어 잡은 것은 아닌지?

○재정지원 일자리는 보통 연초에 채용하고,

약 6~12개월 동안 고용합니다.

2) 양적 확대에만 치우쳐 일자리의 내실에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국민 문화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발판이 되는 다양한 중간단계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불가피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 일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문화예술계 전공자들이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일정한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일자리의 양적확대보다도 근로자 처우개선, 정규직 전환, 취약계층 보호 등 일자리의 질적 향상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화부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문화부는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취업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현장경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 특성 상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채용에는 한계가 있으나, 가급적 취약계층을 고용토록 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일정기간 고용지원(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CG, 3D 등 시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현장체험형 경력개발(글로벌 태권도 인턴 및 봉사 과견 등) 등 시장이 원하는 인재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현장 취업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문화관광 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 방안

1) 문화관광 서비스 관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현황 및 향후 전망,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계획,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취약한 직종 및 원인,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송부해 드린 자료(첨부1, 첨부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 서비스 수요 및 일자리 전망에 대한 분석 수행여부 및 결과, 이를 바탕으로 추진한 정책사례는?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 1)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인력수급전망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1) 콘텐츠산업의 고용효과 정체, 관련 학과 전공자가 현장 요구에 불일치하는 현상 발생에 대한 이유 및 대책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났던 경제위기가 콘텐츠 산업 고용 정체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대학과 산업 현장 간에 연계, 협력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인력양성의 질적 미스매치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부에서는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등 신규 시장 창출, OSMU 킬러콘텐츠 제작지원,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지원 등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시장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 컨소시엄을 통한 학과 운영 지원, 프로젝트 기반의 현장 인력 양성 등 시장 지향적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1인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창업규제, 대기업과의 공정거래상 문제 등 창의적 아이템 상용화에 있어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최근 10년간 공정거래 차원에서 공정위나 규제위, 국무회의 등에 건의한 실적과 조치내역은?

○문화부는 콘텐츠분야 1인 기업의 상업화를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오픈마켓 관련 게임물에 대한 심의규정 및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하고 있는바, 향후에도 중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위, 규제위 등과 협의를 통해 10년도부터 ‘콘텐츠공정거래신고센터’ 및 ‘공정거래 협의체’를 운영하여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개정 콘텐츠산업발전법 제23조 공정한 유통환경조성 등 관련)

\* 콘텐츠공정거래신고센터 : 콘텐츠 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등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공정거래 환경기반을 마련하고 신고된 사안은 방송통신위와 공정거래위에 이관

\* 공정거래협의체 : 유통사업자, 콘텐츠업계 및 정부부처로 구성된 “콘텐츠유통협의체(가칭)”를 운영하여 공정거래환경 조성

3. 국내 관광산업 위축에 따른 일자리창출 감소 우려에 대한 대책

1) 00년 이후 여행수지 적자폭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제수지상 여행수입이 정체현상을 보이는 반면 여행지출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행수지 추세가 국내 관광산업을 위축 또는 정체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09년에는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환율효과로 9년만에 흑자를 기록한 바 있으나, 금년도 관광산업 환경은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 ‘한국방문의해’ 등 대규모 외래관광 수요가 있는 만큼, 우리 부에서는 홍보마케팅 강화와 한국만의 차별화된 고품격의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올해 외래관광객 85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계절별, 테마별 관광콘텐츠 발굴, 수요자 특성에 맞는 타겟별 홍보마케팅 강화, 복지관광 등을 통한 관광수요의 확대 등,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문화부의 주장대로 미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존재한다고 해도 국내 관광산업이 위축 또는 정체된다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관광산업 분야에서의 고용창출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산업규모 성장을 통해 노동의 수요를 늘리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부에서는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한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규제완화, 세제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

습니다. 이는 관광분야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08년을 관광산업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는 등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를 통해 규제완화, 제도개선, 콘텐츠 개발 등 총 130여 개 과제를 발굴,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3대 문화권, 남해안관광 활성화 등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관광(단)지 등 관광기반 조성의 지속적인 추진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관광시설 확충사업의 지원 등을 통해 관광수요 창출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강석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제도개선,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과는?

○제도개선,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해당 사업의 특성 및 시장현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아래 예시와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예측됩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공원 청소업무를 민영화할 경우 600개 일자리 창출 효과

-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에 일반기업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13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대행업무를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할 경우 95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환경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규제완화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2. 환경부의 일모아 시스템 활용도가 낮다. 현재 활용 현황은?

○10년 현재 환경부의 일모아 시스템 관리대상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5대강지킴이, 5대강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국립공원지킴이, 자연환경안내원, 주민감시관리요원 등 5개 사업

※09년 7개 사업 중 지자체온실가스 통계조사, 초등생방과후 환경화학교실은 사업종료로 인해 10년 사업 제외

○현재 5개 사업의 예산 및 실적, 참여자 정보 등은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모집공고는 지역민 및 지역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성 상 일모아 시스템보다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지자체 및 소속·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통해 일모아 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4대강 사업 추진으로 팔당 유기농단지가 줄어들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내용을 파악해 본 바가 있는가?

○현재 팔당지역 유기농가 수는 남양주 36농가(16ha), 양평 11농가(4.7ha), 광주 1농가(1.5ha)로 총 48농가(22.2ha)임.

○경기도는 4대강 사업으로 이전되는 유기농가를 위해 대체부지인 ‘유기농 시범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농가는 대체부지로 이전하는데 합의함.

**(박준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

<1-1>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4.14)으로 배출량 산정, 보고, 검증 등에 필요한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초청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기업 의견 수렴, 현장 실습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이러한 인력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있도록 취업연계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목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급부상하는 탄소시장의 선점·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10년 사업내용

- 예산 : 21억 2000만 원 (250명 전문인력 양성)

※2009년 말 기준 약 225명(21억 원)의 전문인력 양성(연계취업 51명)

- 교재보완 및 민간 자격제도 연구,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제작, 상담센터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

2.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전반

<2-1>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외에 어떤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지?

○최근 산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인 물산업, 폐기물 에너지자원화, 토양처리 등 8개 분야에 대한 취업 연계 사업과

○고급 인력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기후변화, 환경건설링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한 석·박사 인력 양성 목적의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 10년 환경분야 전문인력양성 사업 현황

참고 10년 환경분야 전문인력양성 사업 현황

번호	전략 프로그램	10예산 (억 원)	10양성 인력(명)	담당과	지원 기간	대행기관	
	계	117.67	1,530				
1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전문관리인력 양성	21.2	250	기후대기정책과	6주 6회/연	한국환경공단	
2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운영(기존)	15.0	150	기후변화협력과	5년		
3	국제환경규제·정책 전문인력 양성	3.17	40	해외협력담당관실	36일		
4	생태독성 및 위해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7.0	120	화학물질과	약8주 4회/연	국립환경과학원	
5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 양성	10.0	110	물산업지원팀	4개월 2회/연	한국상하수도협회	
6	토양지하수 전문기술인력 양성	10.0	150	토양지하수과	3개월 3회/연	환경산업기술원	
7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촉진 전문인력 양성	폐기물 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15	150	폐기물에너지팀		3년
		현장실무교육사업	9	90	폐기물에너지팀 자원재활용과		3개월 2회/연
8	지식기반 환경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	6.5	100	녹색기술산업과	3년		
9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5.0	100		3년		
10	환경기술 전문인력양성 지원	현장실무교육사업	5.8		80	3개월 2회/연	
		교육혁신 지원사업	2	10	5년		
		재교육사업	4	160	5일 4회/연		

번호	전략 프로그램	10예산 (억 원)	10양성 인력(명)	담당과	지원 기간	대행기관
11	수치예보전문인력양성	4	20	기상청	1년이내	한국기상 전문인협회

\* 녹색 부분은 특성화대학원 운영 사업

<2-2> 특히 환경부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이 무엇인지와 그 이유는?

○역점을 두는 사업은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 폐기물 에너지화, 온실가스 전문인력 분야 등의 취업연계 사업으로

○동 분야는 신성장 동력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동시에 대학 졸업자의 취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2-3>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취업으로 연계 되도록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교육 프로그램에 1개월 이상 현장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현장지식 취득과 고용이 연계되도록 하고 있으며,

○10년부터는 기업·협회·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인재개발협의회” 운영으로

※물, 폐기물, 토양, 환경컨설팅, 탄소시장 등 5개 부문

-환경 산업별 고용동향 및 직무 분석,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발굴, 취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교육 수요생의 취업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취업포탈(www.ecojob.re.kr) 운영, 취업박람회 등을 통하여 취업알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환경산업·그린에너지전(ENVEX 2010, 10. 6), 녹색성장박람회(10.10) 등과 연계

**(정진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미래의 황금산업, 물 산업육성 계획은 계획에 그치고 있음.

<1-1>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중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수돗물 우수율 제고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하수도 선진화를 위해 새로 도입한 I/I분석 제도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을 통

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가 영세하고 효율이 낮은 행정구역단위의 상수도 사업체계를 광역적 관리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9년12월 경남남부 4개시군(통영, 거제, 사천, 고성)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수공위탁)에 합의하였으며,

○금년에는 3개 권역(전남남서부, 강원남부, 경북동부)를 대상으로 통합운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점차 기타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수율 제고사업 추진>

○국고용자 사업으로 추진하던 상수관망 우수율제고 사업을 10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음.

○10년부터 14년까지 수도사업 광역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상수관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2,300억 원의 국고를 보조할 계획임.

<I/I분석 등 하수도 선진화 추진>

○하수도 선진화를 위해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준공지표로 I/I(침입수/유입수)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하수관거 BTL사업의 20년간 임대료 지급시 하수관리 정비 상태를 분석하는 유지관리 지표로 활용 중에 있음.

\* 현재 I/I 분석은 선진국에서와 동일하게 하수관거 유지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1-2> 핵심기술의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을 연계하여 물산업 분야 우수 대학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지정은 했는가? 우수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전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산업 분야 우수대학 지정 등 우수인력 양성>

○정부는 미래유망 성장분야중 하나인 물 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해 물산업 프로젝트 수주와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 첫째 총 110명을 공개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 중 55명이 기업에 취업한 성과를



거둔 바 있음.

○참고로 산·학·연과 연계하여 실무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당초 검토되었던 물산업분야 우수시범대학 지정사업은 상기사업으로 통합추진되고 있는 것임.

<1-3> 물산업의 수출역량강화, 물산업 연관 산업 육성, 물산업 육성기반 등 모든 추진계획이 계획으로 끝나고 있음.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한 총괄적 대응방안은?

<물산업 수출역량강화, 연관사업 육성 등 기타>  
 ○해외 물산업 진출유망 국가를 중심으로 상하수도 MOU체결 등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기업이 해외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  
 \* 09년 중 알제리 등 3개국과 상하수도 협력 MOU체결  
 ○제3의 물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물 재이용 산업 육성을 위해 물재이용촉진법률 제정 추진 등 분야별 국내 물산업 발전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음.

2. 대기질 개선사업은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는가?

<2-1> DOC, DPF 부착 시 미세먼지는 25%와 70% 이상 감소하나 질소산화물은 오히려 증가하는 제품도 있으며, 질소산화물은 평균 1.6%에 불과하여 효과가 없음.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책은?

○수도권지역 내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DPF 등 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교체·개조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PF, DOC 등 저감장치는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거의 없으나, 저공해엔진 교체·개조나 조기폐차의 경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도 각각 80.0%, 67.6% 저감효과가 있으며,  
 ○매년 운행차 저감사업 예산 중 저공해엔진 교체·개조 및 조기폐차 예산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참고	연도별 운행차 저감사업 예산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합계	839	1,678	2,014	1,509	1,187	1,212
저감장치	699	1,075	1,159	498	468	348
엔진개조	137	585	734	881	608	574
조기폐차	3	18	121	130	111	290

<2-2> DOC의 경우 일부 자동차에는 부착하지도 못했음. 미래산업 기술인 환경기술의 올바른 적용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오류를 범한 사유는?

○DOC는 RV, 소형화물·승합 등 소형차량의 매연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로 05.11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당시, 소형차량에 적용가능한 DPF가 개발되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계획되어 그동안 3.5톤 미만의 소형차량에 부착하여 왔으며,  
 ○09년 5월부터 소형차량에도 부착이 가능하고 DOC 장치보다 저감효율이 높은 P-DPF가 보급됨에 따라 DOC 장치는 10년까지 보급할 계획임

니다.

<2-3>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총량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는 07.7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 1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을 연간 30톤 이상, 황산화물을 연간 2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09.7월부터는 대기 1종 및 2종 사업장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각각 4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 중입니다.  
 ※먼지는 사업장 미세먼지 기여율 미미, 먼지의 특성상 할당기준 설정 곤란 등으로 총량관리 대상항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수도권 대기환경

관리위원회, 09.8)

○총량관리 사업장에 대하여는 5년 단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초과 시

차기년도 할당량을 삭감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구분	계		07.7월(1단계)		09.7월(2단계)		1·2단계 중복	
	사업장	배출구	사업장	배출구	사업장	배출구	사업장	배출구
계	303	1367	118	653	206	812	21	98
서울	14	42	9	27	6	18	1	3
인천	69	363	35	217	38	156	4	10
경기	220	962	74	409	162	638	16	85

3. 폐기물의 리사이클링 제대로 하고 있는가?

<3-1> 폐기물 재활용기술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환경부도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연료화시설을 만들어 지난 9월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철저한 검증절차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여 준공하지 못해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결과는?

○수도권매립지의 가연성폐기물 고형 연료화시설 시범사업은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 대응 및 매립 량 최소화를 통한 매립시설 사용기간연장 등을 위하여 매립되던 가연성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시운전(09.7.27~09.11.10) 기간 중 함수율 초과 및 에너지화가 부적합한 낙엽, 김장쓰레기 등의 폐기물이 반입되어 정상운전 곤란하여 건조기 등 시설보완(09.11.28~10.1.5) 및 적환장에서의 폐기물 보관방법 개선 등 폐기물 분리수거 및 보관·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함수율 탄력 적용을 위한 건조기 온도범위 상향 조정, 공정 보완 등

- 건조설비 운전 온도범위(Range) 조정 : 당초 300 → 400℃

- 버너 용량증설, 열풍량 증가 : 200만 → 250만 kcal/h

○건조시설 개선 등 시설보완 완료 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시공사로부터 준공계가 접수(10.3.30)되어 현재 준공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감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3. 폐기물의 리사이클링 제대로 하고 있는가?

대기오염 총량관리 사업장 현황

<3-2> 건설폐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고부가가치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들이 있음에도 단순매립 처리되고 있음. 폐전주의 골재, 폐아스팔트의 재생 등의 기술들이 개발되었음에도 귀중한 자원들을 단순매립하고 있음  
 자원의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환경기술의 퇴화를 가져오고 미래의 일자리를 사장시키는 결과임.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 판단하는지?

○정부는 건설폐기물이 단순 성·복토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05년부터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건설폐기물로 생산한 고품질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매년 고품질 순환골재 사용량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고품질 순환골재 사용량) 15%(06) ⇒ 18.3%(07) ⇒ 23.9%(08) ⇒ 27.5%(09)

- 그 결과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장이 확대되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증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간처리 시장규모 현황) 7,078억 원(05) ⇒ 8,034억 원(06) ⇒ 9,408억 원(07) ⇒ 10,397억 원(08) ⇒ 1조 3,327억 원(09)

※(중간처리업체 현황) 316개소(05) ⇒ 373개소(06) ⇒ 406개소(07) ⇒ 417개소(08) ⇒ 422개소(09)

- 다만 아직까지도 일본·유럽 등 선진국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비율(%) : 일본 73.1,

일본 65, 독일 60, 독일 60, 덴마크 53, 벨기에 36, 한국 1.8

○이에 따라 순환골재 사용용도 다변화 및 순환골재를 이용한 제품(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까지도 의무사용으로 확대하고

- 의무대상을 민간투자 SOC사업까지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술개발과 정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 환경신기술 현장적용 70%에 불과하다

<4-1> 공공기관의 환경시설공사 및 설계용을 발주하는 때는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진입이 어려움을 겪는 사유는?

○환경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이후 현장 적용 실적에 없는 신기술의 경우 최초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요 수요처인 지자체는 환경시설 설치·관리·운영의 책임부담을 안고 있어 현장적용실적이 없는 신기술은 성능보장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채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4-2>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에도 신기술이 우선 적용되도록 신기술 홍보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신기술 활용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수요자 맞춤형 환경신기술 설명회, 발표회 및 신기술 제도의 교육 확대를 통해 신기술의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며,

※환경신기술 설명회(10.3.30~4.1, 10.10월(예정)), 발표회(10.5.6~7), 신기술제도의 교육확대(09년 4회 → 10년 20회)

○지자체에서 환경신기술 활용시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원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1 시행 예정) : 10.4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

5. 환경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의 환경기술개발로 미스매치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미래 유망 산업인 환경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운영 등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09. 4월부터 환경기술개발부터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운영하고,

-미래 유망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환경 R&D를 지속적으로 확대(09년 1,974억 원→10년 2,138억 원)하고 있으며,

-환경산업체 구조 고도화 사업, 환경산업 관련 융자금 지원,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환경산업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 전문관리인력 양성 등 11개 전문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에 1개월 이상 현장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현장지식 취득과 고용이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년부터는 기업·협회·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인재개발협의회” 운영으로

※물, 폐기물, 토양, 환경컨설팅, 탄소시장 등 5개 부문

-환경 산업별 고용동향 및 직무 분석,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발굴, 취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교육 수료생의 취업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취업포털(www.ecojob.re.kr) 운영, 취업박람회 등을 통하여 취업알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 10년 환경분야 전문인력양성 사업 현황

참고 10년 환경분야 전문인력양성 사업 현황

번호	전략 프로그램	10예산 (억 원)	10양성 인력(명)	담당과	지원 기간	대행기관
	계	117.67	1,530			

번호	전략 프로그램		10예산 (억 원)	10양성 인력(명)	담당과	지원 기간	대행기관	
1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전문관리인력 양성		21.2	250	기후대기정책과	6주 6회/연	한국환경공단	
2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운영(기존)		15.0	150	기후변화협력과	5년		
3	국제환경규제·정책 전문인력 양성		3.17	40	해외협력담당관실	36일		
4	생태독성 및 위해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7.0	120	화학물질과	약8주 4회/연	국립환경과학원	
5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 양성		10.0	110	물산업지원팀	4개월 2회/연	한국상하수도협회	
6	토양지하수 전문기술인력 양성		10.0	150	토양지하수과	3개월 3회/연	환경산업기술원	
7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촉진 전문인력 양성	폐기물 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15	150	폐기물에너지팀	3년		
		현장실무교육사업	9	90	폐기물에너지팀 자원재활용과	3개월 2회/연		
8	지식기반 환경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		6.5	100	녹색기술산업과	3년		
9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5.0	100		3년		
10	환경기술 전문인력양성 지원	현장실무교육사업	5.8	80		3개월 2회/연		
		교육혁신 지원사업	2	10		5년		
		재교육사업	4	160	5일 4회/연			
11	수치예보전문인력양성		4	20	기상청	1년이내		한국기상전문인협회

\* 녹색 부분은 특성화대학원 운영 사업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김성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교육지원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미디어-콘텐츠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국산 콘텐츠가 개발·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 이에 따라 국내 이통사를 중심으로 중소 콘텐츠사업자 및 1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한다는데, 이통사별로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개발자 교육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동통신사별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개발자

## &lt;중소기업 자금지원 내역&gt;

구 분	세 부 내 역
SKT	○기 조성된 상생펀드(09년 1,200억 원 규모로 조성, 583억 원 기 대출)를 통해 대출 지원 -중소 IT협력 업체에 저리 자금 지원 ○콘텐츠 육성펀드(03년부터 2,546억 원 규모로 조성, 1,382억 원 기 투자)로 중소기업 지원 -ICT, 영화, 음악, 게임 분야 등 분야별 콘텐츠 펀드에 투자
KT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향후 3년간 총 450억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국내외 App 통합판매 지원 및 모바일 펀드 조성 -App 개발에 필요한 API 제공, 개발자를 위한 토털 솔루션 제공
LGT	○100억 원을 투입하여 앱스토어(OZ-App)를 구축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 및 자금 지원

## &lt;개발자 교육지원 내역&gt;

구 분	세 부 내 역
SKT	○모바일 전문 교육센터(T-Academy, 10.3월 오픈) 등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의 개발자에 애플리케이션 개발·기획 등 교육 계획 -T-Academy를 통해 연간 약 2,500명의 개발자에게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기획 등 교육 계획 -고려대, KAIST 등 8개 대학과 연계하여 모바일 관련 강좌를 개설(강의교재, 단말기 등 실습기자재 등 지원)하여 연간 약 2,500명을 교육
KT	○개발자 지원센터(Econovation Center, 10.5월 2개소 오픈 예정) 구축 등을 통해 연간 약 1,000명에게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계획 -기획, 개발, 테스트, 마케팅 단계의 개발자 니즈 발굴 및 지원

## (정진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Active-X 기술이 전자상거래 등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에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이에 글로벌 방식의 암호통신기술이 SSL과 OTP방식을 허용하여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에 있어 장애요소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Active-X 종속되어 있어 전자상거래 등의 글로벌 환경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기술(SSL+OTP 등)도입 관련 가이드라인을 5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해당기관은 동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자율

적으로 인증방식을 선택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폰은 보안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이동통신사업자와 백신업체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국가적인 컨트롤 타워를 통해 빠른 위기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타 부처와 협의할 생각은?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향후 스마트폰도 일반 PC처럼 인터넷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침해사고 발생 등의 보안상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도 유관기관, 이통사, 제조업체, 백신업체 등이 참여한 협력체를 구성해 선제적 예방체계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을

구성(1.21)하여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수칙”을 확정·발표함으로써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보안의식을 제고하였으며, 모바일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관련주체별 역할체계를 정립 예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위기 시 상기 대응반을 신속히 가동하여 대응하되,

-금융, 국방 등 특정분야의 사고 발생시에는 금융위원회, 국방부, 국정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정진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공정위는 올 2월초 소주가격 인상을 담합해 온 11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2.3%에 불과하는 등 실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물으셨습니다.

□소주 사건의 경우 부과기준율을 5%로 하고 소주업체들의 부당이득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최종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50%를 감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매출액(1조 2,166억 원)과 최종부과과징금(272억 원)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고> 소주 사건 과징금 산정 내역

구분	심의 결과
관련매출액	1조 2,166억 원
과징금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의 5%
조정과징금 (가중·감경)	임원관여 가중 10% 국세청과의 인상폭 협의 고려하여 20% 감경
부과과징금 단계	50% 감경 (소주가격 인상 시 물가상승폭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이 크지 않았음)
과징금 총액	272억 원

2. 이러한 담합은 중소기업의 신규진입을 제한해서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제한요소가 될 뿐 아니라, 가격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시민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율 이행준수 및 인상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장경제의 기본인 경쟁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담합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과징금 부과 상한 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법 제 55조의3(과징금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또한 05년 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율 상한을 5%에서 10%로 조정한 이후 채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10% 상한 규정을 상당 기간 더 적용한 후 억제효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관련 규정 개정 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윤석용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아직도 구두발주, 부당납품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해결은 미흡한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시행예정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가능하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간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 결과 어음결제비율이 감소하는 등 하도급거래상황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습니다.

\* 법위반혐의업체비율 : (00) 81.9%→(05) 58.5%→(09) 42.9%

\* 어음 결제비율 : (00) 45.8%→(05) 11.5%→(09) 6.8%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두발주, 기술탈취, 부당납품단가 인하 등 전통적인 갑-을관계에 따른 불공정하도급 거래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2009년 공정위가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21.0%가 구두발주 경험이 있으며 22.1%가 기술탈취·유용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2009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실태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의 60.7%가 ‘납품단가 인하’를 중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추정제, 기술탈취금지,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도입하였습니다.(10.7.26 시행예정)

○하도급계약 추정제 등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기술탈취 행위를 중점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납품단가조정협의를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정착시키고 부당단가인하에 대해 중점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구두발주 후 위탁취소·비용전가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며, 원가부담의 합리적 배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갑-을 관계의 변화를 위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확산을 통해 하도급거래 문화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생협약을 공기업, 유통 등의 분야로 계속 확대하고, 그 효과가 2차 이하 중소협력사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 10. 3월 말 현재 131개 대기업이 5만 2,789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납품단가 인상 등 총 3조 353억 원의 협력사 지원효과 발생

**(김성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 심화, 불공정거래 문제 등에 의해 중소기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와, 주요국과 비교할 때 국내시장에서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산업에서 어느 측면이 취약한지를 물으셨습니다.(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분석자료 제출)

□중소기업의 47.9%(2008년, 제조업 기준)가 하

도급 업체인 거래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공정위는 그간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어음결제비율이 감소하는 등 하도급거래 상황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습니다.

\* 하도급법 준수 비율 : (00) 18.1% → (05) 41.5% → (09) 57.1%

\* 어음 결제비율 : (00) 45.8% → (05) 11.5% → (09) 6.8%

□그러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구두발주 후 위탁 취소·변경, 기술탈취·유용 등 전통적 갑-을관계에 따른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 2008년 중기중앙회의 ‘수급기업의 납품애로사항(복수응답)’ 조사결과 납품단가 인하(60.7%)와 원자재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54.7%)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힘.

\* 2009년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결과 원사업자의 21%(제조업 47%)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구두발주로 인한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26.0%

\* 2009년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결과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중소기업의 22.1%가 기술자료의 탈취·유용을 경험했다고 응답

○이는 아직도 중소기업을 상생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힘의 우위를 이용한 비용전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EU 등에서는 하도급법을 운용하고 있지 않아 이들 국가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와 유사한 하청법을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불공정하도급거래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청법 위반 피의사건 처리건수(10년 단위)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79~88) 14,175건 → (89~98) 19,068건 → (99~08) 22,685건

- 특히 계약서를 주지 않고 거래하는 구두발주 및 하청대금 지불 지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구두발주 : (79~88) 6,203건 → (89~98) 13,236

건→(99~08) 18,520건

\* 지불지연 : (79~88)1,583건→ (89~98) 2,989건→(99~08) 5,861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 분석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용역자료(자동차·전자산업 하도급거래 실태분석)는 정부 정책연구자료 공개사이트<www.prism.go.kr, 공정위 2009년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2. 2010. 3. 29. 업무보고에서 재정부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상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재정부와 정책협의를 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정책협의 자료 제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약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데 재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시로 정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협의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가 제도적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인지 물으시면서,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현재 산업별로 추진 중인 정책과 그 실효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평가를 물으셨습니다.(성과평가 분석자료 제출)

아울러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관행상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법 집행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근본적인 거래관행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법 집행과 관련, 지난 2009년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제조·용역업 부당단가인하 조사, 상습범위반업체 조사, 건설업 불공정하도급거래 조사 등을 통해 총 1만 5,680개 하도급업체가 860억 원을 지급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의 경우 1999년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약 20만 개 하도급업체가 총 3,567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원사업자(5000개)와 수급사업자(9만 5000개)를 대상으로 서면계약서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Cross-check을 통해 드러난 법 위반혐의의 자진시정 유도 및 현장조사

○올해에는 하도급거래에 대한 법집행효과가 2·3차 협력사까지 미칠 수 있도록 모기업 외에 1차 협력사의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시행(09.4.1)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두발주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계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10.7.26. 시행)

○이외에도 반복적 범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습범위반업체 명단공표제도’,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탈취·유용 금지’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10.7.26.시행)

□그러나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도급거래 문화를 갑-을관계에서 Win-Win의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힘의 우위에 기초한 수직적·종속적 관계에서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공기업, 유통 등의 분야로 계속 확대하고, 그 효과가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대기업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자금, 인력, 기술지원 등 상생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중소기업과 약속하는 것으로서, 10.3월 말 현재 131개 대기업이 5만 2,789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8개사에 대한 협약이행평가 결과 총 3조 353억 원의 협력사 지원 효과 발생

3. 최근 창의적 아이템 사용화 관련 부문 (예 아이폰의 앱스토어 등 정보통신의 콘텐츠



산업 등)과 같이 1인 기업, 소규모 기업 등이 창업하고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공정거래상 제도적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보통신 콘텐츠에 대한 대가는 시장경제의 작동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 부당한 하도급 거래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 및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공정위는 2008년 이후 경쟁제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소관부처 및 해당 업계에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스산업, 손해보험산업, 항공운송산업 등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경쟁제한제도 및 관행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8년 이후, 제도개선과 사업자의 자율적 법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의 구조적 문제(정부규제, 소비자정보 제한, 경쟁제한적 관행)를 분석하는 시장분석(Market study) 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주요분석대상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독과점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상분야 : 항공운송산업(08.12), 인터넷포털산업(08.12), 손해보험산업(09.1), 영화산업(09.1), 석유산업(09.9), 제약산업(09.9), 가스산업(09.11)

※시장분석 대상업종은 시장집중도(구조지표), 영업이익률(성과지표), 점유율 순위변동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시장분석의 대상은 개별기업 또는 기업유형이 아니라 특정산업이므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별도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4-2. 특히 미디어-중소 콘텐츠 사업자 등 창의적 아이템산업은 초기 산업으로서 기업 규모나 산업·시장 성숙도 등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미흡, 관행상의 문제 등이

있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장을 물으셨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분석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가와 그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해 추진한 정책수단을 주요 내용, 기대효과 및 목표 등을 중심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등 문화산업을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산업에 있어서의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미흡사항, 관행상의 문제 등을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공정거래협약에 대해 공정위가 기대했던 효과와, 현재까지 성과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공정거래협약에 대해 공정위가 기대했던 효과는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중소기업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협약 성과는

○10년 3월 말 현재까지 협약체결 후 1년이 경과한 58개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유지와 상생협력을 위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대기업이 자율적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3대가이드라인”을 도입·운영하여 자율적인 공정거래 여건을 조성하였고

○협력사에 대한 금융(자금)지원, 결제기간 단축, 현금(성) 결제비율 향상, 납품단가 인상,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통하여 자금지원 등 총 3조 353억 원의 지원효과가 있었습니다.

<협약평가 대상 58개사의 지원효과(3조 353억 원)>

구 분	계	자금(금융) 지원	납품단가 인상	자재구매대행, 설비지원 등
지원금액	3조 353억	1조 7,000억	9,625억	3,728억

5-2. 2007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협약체결 기업 현황과 그동안 기업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했는지 물으셨습니다.

○25개 대기업 집단의 131개 대기업이 52,000여 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체결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07년 9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10년 3월 말 현재 협약 체결현황>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3월까지
대기업	131	11	65	51	4
협력사	52,789	6,754	20,507	24,798	730

\* 25개 대기업 집단 : ①삼성(11) ②현대차(11) ③SK(16) ④LG(7) ⑤롯데(11) ⑥포스코(13) ⑦KT(1) ⑧두산(6) ⑨대림(1) ⑩현대건설(1) ⑪현대산업개발(1) ⑫현대중공업(3) ⑬CJ(11) ⑭계룡건설(1) ⑮대우건설(1) ⑯GS(11) ⑰한화(9) ⑱LS(7) ⑲동부건설(1) ⑳한진중공업(1) ㉑태영건설(1) ㉒신세계(1) ㉓삼성테크(1) ㉔현대백화점(1) ㉕이랜드(1)

\* 5대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2001아울렛) 및 5대 홈쇼핑(GS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포함

2010년 3월 말 현재까지 이행평가 결과 양호 이상의 등급을 획득한 34개사 중,

○양호 등급을 획득한 9개 업체에 대해 1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공정위 위원장 표창

○우수 등급을 획득한 22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서면실태조사 및 하도급 관련 직권조사 면제와 공정위 위원장 표창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서면실태조사 및 하도급 관련 직권조사 면제와 공정위 위원장 표창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5-3. 공정거래협약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협력사 양측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경우 대·중소기업 공정거래협약이 자율적 공정거래질서 유지와 협력사에 대한 기술이나 자금지원을 통하여 상호간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자금사정이 어려운 일부 대기업의 경우 협약을 통한 협력사 지원에 다소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경우도 대기업으로부터 결제조건 개선, 자금 및 기술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 잇점이 있어 협약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협약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6.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문제에 있어 최근 5년간 민원제기, 신고, 건의사항 등의 접수건수를 유형별로 제출하고, 유형별로 주요 내용과 조치내역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신고사건 접수 및 조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lt;신고건수 및 조치건수(05~09년)&gt;

(단위 : 건)

연도	신고 <sup>1)</sup> 건수	조치 <sup>2)</sup> 유형별 처리건수							
		계	시정 명령	경고	조정	심의절차 종료	심사 불개시	무혐의	*기타
2005	739	669	26 (1)	26	23	242	277	18	57
2006	728	695	86 (1)	29	18	216	283	12	52
2007	749	669	92 (2)	42	107	181	197	35	15
2008	1,131	1,191	90 (8)	87	236	290	361	69	58
2009	1,398	1,397	72 (-)	99	371	350	308	39	158

\* 1)신고건수는 접수년도, 2)조치건수는 조치년도 기준임

\* ( )은 과징금 부과건수이며,\* 기타는 종결처리, 조사중지 등임

□최근 5년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신고사건의 유형별 접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lt;연도별 접수유형(05-09년)&gt;

연도	대금 미지급	대금지연 지급	어음 할인료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 감액	선급금 미지급	수령 거부	지연 이자 미지급	기 타*	계
2005	518	5	24	9	33	6	38	8	98	739
2006	496	2	28	22	26	9	24	11	110	728
2007	520	3	35	15	26	4	34	13	99	749
2008	848	5	48	23	32	11	36	8	120	1,131
2009	989	7	62	13	29	11	33	28	226	1,398

\* 기타 : 부당반품, 설계변경 미조정 등

7. 가맹점의 약관으로 인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제기, 신고, 건의사항 등의 유형별 접수건수와 유형별 주요 내용과 조치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공정위가 수행했거나 수집했던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분석 자료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06~10. 3월 동안 가맹점의 약관으로 인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제기, 신고, 건의사항 등의 유형별 접수건수와 조치내역은 총 15건입니다.

○다만 민원제기, 신고, 건의사항 등은 유형의

구분없이 접수되고 있어서 합산하였습니다.

구 분	접수 건수*	처리현황		
		시정권고	자진시정 (심의절차 종료)	무혐의
합 계	15	7	4	4

\* 민원제기, 신고, 건의사항 등 합산

□처리건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공정위가 수행했거나 수집했던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 등과 관련하여 09.9월 및 10.3월 실

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에게 건전한 가맹사업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반기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가맹금 예치제,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분쟁조정절차 등 변화된 제도와 업계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의 개정(외식업) 및 제정(도·소매업, 서비스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

**(강석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제도개선·규제완화가 금융 부문의 일자리를 얼마만큼 늘리는지를 추정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불확실성도 크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의 08~09년 금융업 취업자 수 증감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국가의 금융업 취업자 수 증감현황자료는 금융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07년 기준 주요국가의 금융업 고용현황(비중)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국가의 서비스 업종별 고용비중(2007)>

(단위 : %)

산업구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전체 산업	100	-	100		100		100	
서비스업	81.61	(100%)	76.56	(100%)	72.38	(100%)	68.2	(100%)
금융 보험업	4.2	(5.1%)	3.09	(4.0%)	3.02	(4.2%)	2.72	(4.0%)
금융	"	-	1.79	(2.3%)	1.76	(2.4%)	"	-
보험	"	-	0.63	(0.8%)	0.54	(0.7%)	"	-
관련업	"	-	0.67	(0.9%)	0.72	(1.0%)	"	-
기타 서비스업	77.4	(94.8%)	73.46	(96.0%)	69.36	(95.8%)	65.48	(96.0%)
부동산, 임대, 사업	14.82	(18.2%)	15.91	(20.8%)	14.15	(19.5%)	11.97	(17.6%)
도소매, 음식·숙박	22.53	(27.6%)	17.08	(22.3%)	19.51	(27.0%)	25.09	(36.8%)
운수, 통신	4.65	(5.7%)	6.09	(8.0%)	5.54	(7.7%)	5.76	(8.4%)
커뮤니티, 사회, 개인	35.4	(43.4%)	34.38	(44.9%)	30.16	(41.7%)	22.66	(33.2%)

주1) 전체 산업에 대한 업종별 비중을 나타낸 수치 / 괄호안은 서비스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2) 자료 : OECD, STAN Database for Structural Analysis

**(정희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언제 시행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자체 가맹점을 가진 7개 신용카드업자 중 5개사\*는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했습니다.

\* 일부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IT시스템 개발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수수료율 인하가 4월 중순경 이후 시행 가능

※(참고) 현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총 20개로서 자체 가맹점을 가지지 않은 13개 신용카드업자는 BC카드사, 국민은행 등 타 신용카드업자 가맹점을 이용

○다만 인하내용을 점검한 결과, 재래시장·중

소 가맹점과 대형 마트·백화점 간의 카드수수료를 격차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려운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를 유도했습니다.

□신용카드업자들은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재래시장·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대형마트·백화점의 카드수수료율 수준 이하로 인하하여 4월 중순경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 (미소금융 심사가 까다롭고 대출실적이 낮아 사칭하는 업체까지 출현) 앞으로 어떻게 미소금융이 잘 정착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미소금융이 점차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대출기준을 변경하기 보다는 미소금융 지점 확대, 컨설팅 기능 강화, 여타 서민금융지원 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 운영상의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월별 대출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1월에는 120명에게 7.4억 원
- 2월에는 245명에게 17.5억 원
- 3월에는 282명에게 22.1억 원을 대출

□한편 미소금융의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미소금융을 사칭하는 대부업체나 브로커들로부터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 홍보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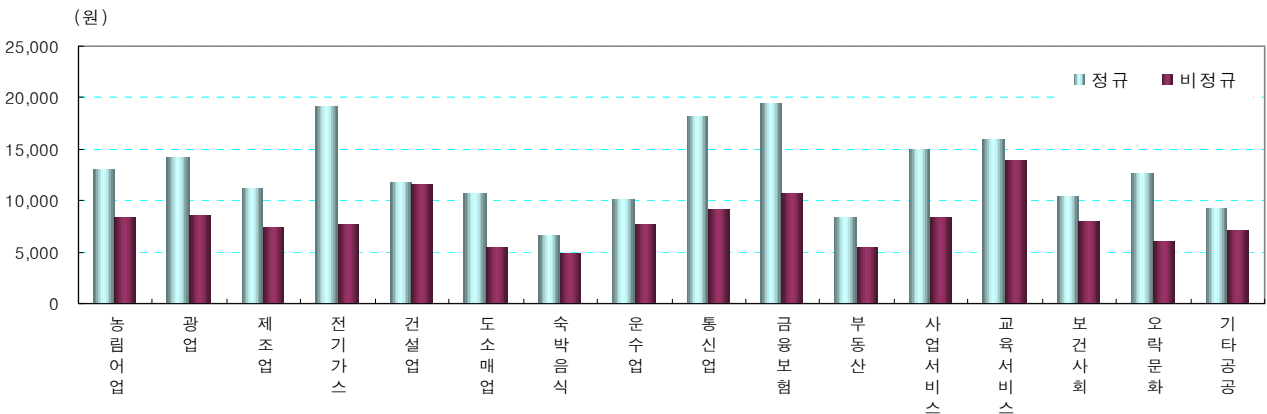
**(홍영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금융산업과 여타산업 간 급여수준의 비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2008년 고용행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09.5월 발표)’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업의 정규직 시간당 정액급여는 1만 8,116원으로 전기·가스·수도사업(1만 8,737원/시간) 부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 시간당 정액급여>



(단위 : 원, %, %p)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수도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오락문화운동관련	기타공공
전체	11,331	13,943	10,782	18,737	11,667	9,554	5,696	9,960	17,182	18,116	7,275	13,982	15,306	10,159	9,681	8,958
정규근로자	13,053	14,274	11,147	19,147	11,705	10,814	6,750	10,237	18,112	19,436	8,420	15,013	15,992	10,419	12,667	9,325
비정규근로자	8,421	8,578	7,460	8,858	11,596	5,559	4,959	7,760	9,195	10,790	5,464	8,491	13,929	7,987	6,105	7,173
	(64.5)	(60.1)	(66.9)	(46.3)	(99.1)	(51.4)	(73.5)	(75.8)	(50.8)	(55.5)	(64.9)	(56.6)	(87.1)	(76.7)	(48.2)	(76.9)
	[14.1]	[-6.1]	[3.6]	[3.2]	[-6.0]	[-6.4]	[-3.2]	[-16.8]	[3.2]	[4.2]	[3.6]	[-1.8]	[-6.9]	[0.4]	[-1.0]	[1.9]

( )는 정규 대비 비정규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 비율

[ ]는 전년 대비 증감

**(홍희덕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최근 5년간 금융권별 인턴의 정규직 전환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턴채용인원 및 정규직 전환인원(비율)

(단위 : 명, %)

구 분		06	07	08	09	10.3
금융 공기업	인턴채용인원	-	-	97	1,206	525
	정규직전환인원 (비율)	-	-	-	24(2%)	-
은행	인턴채용인원	-	-	-	6,416	3,831
	정규직전환인원 (비율)	-	-	-	203(3.1%)	-
보험	인턴채용인원	377	405	737	705	178
	정규직전환인원 (비율, %)	111(29.4%)	111(27%)	254(34%)	141(20%)	64(36%)
증권	인턴채용인원	225	354	564	1,510	259
	정규직전환인원 (비율, %)	77(34%)	105(30%)	112(20%)	227(15%)	9(3.5%)
제2금융	인턴채용인원	148	152	170	398	39
	정규직전환인원 (비율, %)	33(22%)	58(38%)	47(27.6%)	109(27%)	6(15.4%)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김성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금융위는 업무보고 시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고하였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기업과 구직자, 창출된 일자리 수 등 각 프로그램별 성과와 이에 대한 위원장의 평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프로그램 중 일부는 실행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는 아직 추진 중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기업은행의 온라인 취업포털(“잡월드”)을 통해 09.2월부터 10.3월 말까지 15,000여 명의 청년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타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2. ABS 발행주체요건(상장법인 및 BBB이상 기업 등)완화 등 자산유동화제도 개편 관련 세부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재 금융기관, 공기업,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만 발행이 가능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저신용도인 중소기업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ABS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예시 : BBB이상 → BB이상 법인

□현재 관계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발행요건 완화, 국제 논의 중인 공시의 강화 등 ABS관련 전반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정부입법절차 등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3. ABS 발행주체요건 완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및 각 요인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유동화증권은 발행주체가 아닌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주체의 신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할 실익이 낮으나,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

○자산유동화법 제정 당시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발행주체의 범위를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및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 등으로 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시장참가자들의 거래경험이 축적된 점 등을 감안할 때,

\* 09년 중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총액 35.9조 (전년 대비 74.6% 증가)

○발행주체요건의 일부 완화로 인한 위험요소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글로벌위기 이후 논의되고 있는 바를 반영하여,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유동화상품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영, 유동화 관련 계약의 이행 및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공시근거 마련

4. 한국경제의 고용없는 성장과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된 데에는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전기, 전자 등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 중간 소재·부품산업의 취약성 등으로 수출 호조에 불구하고 국내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취업유발계수(명/10억 원) : (00) 18.1 → (07) 13.9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숙박업은 과당진입에 따른 저수익성 등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 고용창출 여력이 큰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은 진입규제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기업의 고용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촉진, 기업환경 개선, 신성장 동력 육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금융 공기업과 자본시장 등 금융을 통한 기업의 투자자금 지원 활성화, 신성장 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5. 2008년 이후 외환건전성 강화를 위해 발표한 정책수단(Action Plan)의 주요 내용, 기대효과 및 목표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와 향후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외환건전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09. 9. 25일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 발표, 11월 19일 구체적인 세부방안 발표 후 금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만 유동화 가중치 적용,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 의무화는 도입 초기 은행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기대효과
외화유동성비율 규제 정비	- 외화자산의 회수 가능성을 반영한 유동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유동성비율 산출	- 실제 유동성 검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화 자산·부채 간 만기불일치 해소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 위기상황 분석 등을 포함한 자체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	-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에도 자체 대응

	주요 내용	기대효과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 의무화	- A등급 국공채 및 회사채 등 외화안 전자산을 총 자산의 2% 이상 보유	-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에도 자체 대응
외환과생상품 리스크 관리기준	- 선물거래 대비 125% 이상의 선물환 거래 억제	- 과도한 환헷지 방지 및 거래상대 방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
중장기 외화대출 채원조달비율 강화	- 산정기준 강화(1년 이상→1년 초과), 규제비율상향(80% 이상→90% 이상)	- 은행권의 차입구조 장기화 유도
자산운용사의 합리적 환헷지 관행 유도	- 환헷지 비용 및 효과 등에 대한 대 고객 정보 제공 강화	- 과도한 환헷지 방지

6. 외환건전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정책/규제 중 국내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와 같이 강화조치에서 제외된 정책수단/규제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외은지점의 외화유동성에 대한 직접 규제는 종전과 같이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외은지점 외화유동성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규제 시 우리의 외화자금조달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7. 2008년 이후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발표한 정책수단을 한시적 지원과 영구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주요내용, 기대효과 및 목표 등을 일지형식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첨부 1>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1>

발표 시기	정책명	목적·기대효과	주요내용	집행실적(조치사항)	관련 부처																						
한 시	09.2.12 신용 보증 확대	신용 보증 확대 조치 시행 → 은행 신용리스크 부담 완화 → 중소기업과 서민 금융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09년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로 잔액 만기연장 신규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심사 기준 및 보증한도 등 대폭 완화 성장기반 확충에 필요한 핵심분야*와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100% 보증 *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일선 창구에서 신속·과감한 보증이 이루어지도록 처리절차 및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처리직원에 대해 면책조치 Fast-Track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자금 및 보증 공급	<4대 보증기관(신·기보, 지역신보, 수보) 보증공급 현황(총보증 기준)> (단위: 억 원)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2007년</td> <td>2008년</td> <td>2009년</td> <td>10년 1~2월</td> </tr> <tr> <td>공급</td> <td>445,925</td> <td>482,962</td> <td>775,463</td> <td>77,477</td> </tr> </table> <Fast Track 프로그램 지원 실적> (단위: 조 원)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084분기</td> <td>09년</td> <td>10년.1~2월</td> </tr> <tr> <td>지원업체수(개)</td> <td>1,672</td> <td>9,578</td> <td>130</td> </tr> <tr> <td>지원액(조 원)</td> <td>2.8</td> <td>21.5</td> <td>1.0</td> </tr> </table>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10년 1~2월	공급	445,925	482,962	775,463	77,477	구분	084분기	09년	10년.1~2월	지원업체수(개)	1,672	9,578	130	지원액(조 원)	2.8	21.5	1.0	금융위 기재부 지경부 중기청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10년 1~2월																							
공급	445,925	482,962	775,463	77,477																							
구분	084분기	09년	10년.1~2월																								
지원업체수(개)	1,672	9,578	130																								
지원액(조 원)	2.8	21.5	1.0																								
영 구	08.11.3 08.12.18 09.12.16 국책 은행 중기 자금 공급	국책 은행 중기 대출 확대 → 중소기업 자금사정 정개선·경영안정 → 경기회복에 기여	08년 및 09년 선제적 중자(산은 1.4조 원, 기은 1.3조 원)를 통해 중소기업대출 여력확대 여신심사시스템 개발, 여신 승인 하부 위임 등 신속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온렌딩 방식의 대출 개시	<국책은행 중기대출 실적> (단위: 억 원)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2007년</td> <td>2008년</td> <td>2009년</td> <td>10년 1~3월</td> </tr> <tr> <td>산업은행</td> <td>73,283</td> <td>100,455</td> <td>125,026</td> <td>28,907</td> </tr> <tr> <td>기업은행</td> <td>280,013</td> <td>290,804</td> <td>356,338</td> <td>91,858</td> </tr> <tr> <td>정책금융공사</td> <td>-</td> <td>-</td> <td>2,305</td> <td>4,733</td> </tr> </table>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10년 1~3월	산업은행	73,283	100,455	125,026	28,907	기업은행	280,013	290,804	356,338	91,858	정책금융공사	-	-	2,305	4,733	기재부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10년 1~3월																							
산업은행	73,283	100,455	125,026	28,907																							
기업은행	280,013	290,804	356,338	91,858																							
정책금융공사	-	-	2,305	4,733																							

\* 09.2.12(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

8. 한시적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금융위의 향후 조치계획과 한시적 지원을 종료할 경제여건의 의미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계획대로 금년부터 위기대응 한시적 확대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상향조정된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중이며, 기업별 보증한도는 하반기부터 정상화\*\* 예정입니다

\* (일반기업 기존보증) : (09년) 95% → (10.1월부터) 90% → (10.7월부터) 85%

(일반기업 신규보증) : (10.1월부터) 신용등급별 50~85% 차등적용 (위기이전 수준)

(핵심분야 신규·기존보증 공통) (09년) 100% → (10.1월부터) 95%

\*\* (신보) 수출자금 : 연간매출액의 1/2 → 1/3, 제조업 : 연간매출액의 1/2 → 1/4

○특히 경기회복기조 공고화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상반기까지는 보증 만기연장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은행권도 정부의 보증 만기연장 조치에 맞추어 금년 상반기까지 중기대출에 대해 만기연장하기로 자율결의(09. 12월)

□이같은 위기대응 비상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는 ○전반적인 경기회복 기조와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개선 등을 감안하고,

○자생력 없는 기업이 공적 보증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9.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무분별한 자금지원에 따라 한계기업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지적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도 공적 보증에 안주하는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 일시적으로 상향조정했던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고 있으며

- 자생력을 상실한 한계기업 등에 대한 심사기능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

과 등을 통해 보증감축 및 구조조정 유도하는 등 보완조치도 추진 중입니다.

(박준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①사업단가는 얼마인가? ②경제적 여유가 있는 금융인력에 대해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③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투입이 적절한 것 아닌지? 금융위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별도로 조치하고 있는 것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① 사업단가 관련>

□금융인력양성사업은 전체 교육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어 사업단가를 일괄적으로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 녹색금융리더 양성사업(9억)은 MBA에 교육비 일부를 정액지원

금융실무인력 양성사업(10억)은 전체 교육비의 35%를 지원

<② 금융인력 양성에 국비지원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

□실무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은 녹색금융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책방향과 부합하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교육을 추진한다는 점에 타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업종이 고수익 업종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정부 인력양성사업에 비해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부담(매칭비율) : 타 업종 80% 이상, 금융업 35%

<③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지출이 적절한 것 아닌지? 이를 위해 교육훈련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녹색금융, 퇴직연금 등 금융시장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지적대로 전문인력 양성 못지않게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금융위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협회 연수원으로 하여금

취업준비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금융협회 연수원들과 MOU를 체결하여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취업준비생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토록 유도

○앞으로 금융위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 : 녹색금융 특화MBA 지원의 저소득 수혜 가능성>

□녹색금융 특화MBA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예산은 상당부분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장학생은 학교별로 통상 학업성취도,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발하므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교육훈련 기회가 부족한 상황.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금융회사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독려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열악한 계층이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고, 재취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등을 통한 능력개발이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다만 금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금융산업”에 한정하여 볼 사안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시장 여건, 제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서

-주무부처인 노동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능력개발, 생계비 대부 등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비정규직 관련 주요 재정사업(예시)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 비정규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향상 프로그램, 비정규직 근로자 장학금 지원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회사의 청년인턴 채용 등이 구직자의 직무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정부는 금융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직접적 재정지원은 금융인력에 대한 현저한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때까지로 한정하는 등 운용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녹색금융 등 시장에서 관련인력을 적절히 공급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금융인력 양성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2013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시장의 수급현황을 보아가며 적절한 사업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신성장동력 녹색금융분야 추진계획(금융위, 09. 5)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대응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금융위의 ‘금융인력양성사업’과 기재부의 ‘국제금융인력 양성과정’과 중복 우려 및 통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재부의 국제금융인력 양성사업은 대학생 및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금융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인 반면,

○금융위의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금융업계 재직자들에게 업권별 특화교육을 제공하여 녹색금융 등의 분야에 대한 질적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두 사업은 목적, 대상, 범위 등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두 사업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대상 및 범위 등이 중복될 경우에는

○각자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 노동부와 협조하여 실업자, 재직자 훈련을 하면 별도의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융위의 금융인력 양성사업은 신성장동력인 녹색금융 등 아직 시장에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에의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인력 양성사업은 시장, 노동부 등에서 제공하는 일반적 훈련사업에서 포괄할 수 없는 부분에서의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개별부처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뿐 아니라, 타 부처에서도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문광부),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교과부) 등 노동부의 훈련프로그램 외에 부처별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별도로 추진 중

6. 인턴제는 급조된 일자리로 비정규직만 양산 - 인턴 이후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융권 인턴 제도는 취업을 앞둔 청년층에 폭넓은 직무훈련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도 유능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인턴십과 정규직 원 채용계획을 연계하여 우수인턴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보장을 제도화할 경우 청년층에 폭넓은 직무훈련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의 인턴제도가 자칫 크게 위축될 우려도 있는 만큼,

○현행 인턴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턴제도를 활성화·내실화하여 사실상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비중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금융위에서 일자리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융부문의 경우 일자리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정부는 금융권 청년인턴 채용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전문인력 등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금융 특화MBA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전문인력이 양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금융인력 양성사업을 통한 실습위주, 장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금융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2009년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채정에서 중소기업은행에 8000억 원 출자, 신보에 9800억 원, 기보에 7200억 원을 각각 출연하였으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조달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출연·출자를 확대하였고,

○이를 재원으로 09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대출과 보증기관 신용보증을 확대공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상당수준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자금사정 전망지수(BSI\*)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호전·안정화추세이며

\* 중기자금사정 전망 BSI : 62(08.12) → 84(09.6) → 91(09.12) → 92(10.3)

○중소기업 등의 Fast Track 및 보증 신청 건수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9.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1분기 (1.1~3.19)
Fast Track신청기업수(개)	7,782	2,792	730	297	220
신용보증 신청건수(만건)	6.1	4.3	2.2	2.0	1.8

□다만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자금사정 동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2. 금년부터는 신용보증규모를 점진적으로 축

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점진적 축소의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작년 신용보증 공급 확대는 유례없는 세계적 금융위기를 맞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흑자 도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조치였습니다.

□그간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노력으로 중소기업 자금상황 개선,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 등의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있었으나,

○한편 공적보증에 안주하는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자생력을 상실한 한계기업 등의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올해부터 위기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정상화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신용보증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면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 있을 것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08년 하반기에서 09년에 걸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조치는 세계적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중소기업이 신용경색으로 흑자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중소기업 자금사정도 꾸준히 개선되는 점을 감안하면

○위기대응 비상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생력 없는 기업이 공적 보증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와 이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비상적인 금융지원 확대조치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는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 미소금융 대출자격은 신용정보 회사 3사 중에 한 곳에서 신용등급을 평가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등급평가의 형평성이 없는 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신용정보회사 3사 중에 1개 회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면 대출자격이 인정되므로,

○오히려 신청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5. 미소금융 대출자격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정한 것은 서민의 자활지원이라는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현재 금융회사 이용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7등급 이하를 미소금융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신에 6등급으로 미소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보증대출(지역신보), 신용회복(신복위, 신복기금) 등 다른 서민금융지원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앞으로 미소금융의 대손율이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고객기반을 잠식할 수 있는 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대출회수를 위해서는 수혜자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관건인바, 이를 위해 대출심사 단계부터 컨설팅, 사후관리 단계까지 수혜자에 대해 밀착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소금융지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점의 대출 실적 및 회수 등 성과에 대해 철저히 평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소금융은 향후 10년간 2조 원으로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과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입니다.

\* 08년 말 기준, 상호금융 165조 원, 저축은행 7조 원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미소금융은 제2금융권을 잠식하기보다는 서민금융회사조차 이용하기 곤란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7. 현 시점에서 미소금융의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제도상·운영상의 개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초기 높은 관심과 대출심사 기간 등으로 인해 지점 방문자 수 대비 실제 대출이 많지 않았으나, 제도가 안착 되어감에 따라 대출실적이 차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월별 대출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1월에는 120명에게 7.4억 원
- 2월에는 245명에게 17.5억 원
- 3월에는 282명에게 22.1억 원을 대출

□미소금융이 점차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대출기준을 변경하기 보다는 미소금융 지점 확대, 컨설팅 기능 강화, 여타 서민금융지원 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 운영상의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대출기준 개선 여부는 대출실적 등 운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서민들의 자금수요, 미소금융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진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중견기업이 그간 고용창출을 위해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에 비해 결과가 부족함. 이에 대한 금융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 금융·세제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혜택도 종료되어 경영상태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인식을 같이 하여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전략에 따라 금융위도 향후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 신·기보 등 국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여신 및 보증이 갑자기 축소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에 지원되던 은행의 여신을 중견기업으로 돌려야 한다는 금감원에 반해, 금융위는 중견기업 지원은 시급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작년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초과수요 상황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금융·세제 등 정책적 지원의 일시종료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영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수립·발표하였으며

○향후 동 전략에 따라 중견기업에도 금융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확대지원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중견기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